

2022 가을호(통권 224호)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호

2022 Autumn

교육개발



CEO 칼럼

앞으로의 50년, 협력의 힘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미국 윌리엄 T. 그랜트 재단

아담 가모란(Adam Gamoran) 이사장과의 만남

포토갤러리

사진으로 보는 KEDI 50년

KEDI 50년 성과와 과제

“더 나은 삶, 교육을 위한 KEDI 50년 성과와 과제”

1. 지나온 5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성과
2. 다가올 5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도전과 과제

KEDI에 바란다

1.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란다
2. KEDI의 미래 역할과 발전 방향:
지식공유와 학습문화, 네트워크 과학의 관점에서
3.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언
4. KEDI에 바란다. 학부모를 가르쳐 달라.

한눈에 보는 KEDI 50년 연구

한눈에 보는 KEDI 50년 연구·사업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 50년

교육통계 및 주요 지표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육 50년의 변화



ISSN 1228-291X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교육개발
2022 가을호



ISSN 1228-291X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원장 류방란

편집장 장혜승

홍보출판심의위원회

이쌍철, 장혜승, 이희현, 이동엽, 최정윤, 백승주,

이선호, 손찬희, 남신동, 조진일, 정경아

편 집 정경아

디자인 더생각 070.4110.1222

인 쇄 세일포커스 주식회사 02.2275.6894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발 행 2022년 가을호(통권 224호)

계간등록번호 진천, 마00001

등록변경 2018년 4월 26일

정 가 6,500원

구독문의 043-530-9234, keditor@kedi.re.kr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우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06



04

CEO 칼럼

앞으로의 50년,
협력의 힘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06

파워인터뷰

미국 윌리엄 T. 그랜트 재단
아담 가모란(Adam Gamoran) 이사장과의 만남

16

포토갤러리

사진으로 보는 KEDI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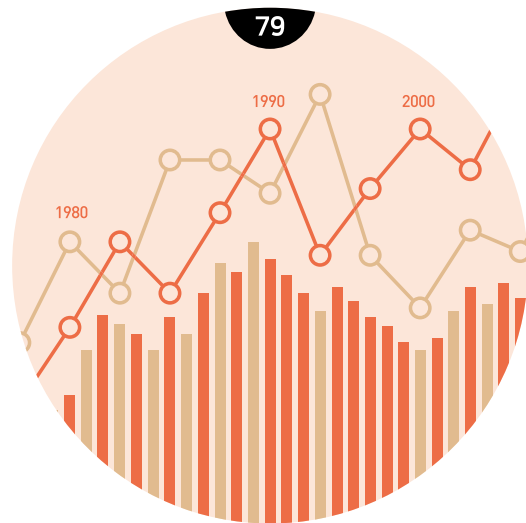
- 24 KEDI 50년 성과와 과제**
“더 나은 삶, 교육을 위한 KEDI 50년 성과와 과제”
1. 지나온 5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성과
 2. 다가올 5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도전과 과제

- 54 KEDI에 바란다**
1.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란다
 2. KEDI의 미래 역할과 발전 방향:
 지식공유와 학습문화, 네트워크 과학의 관점에서
 3.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언
 4. KEDI에 바란다. 학부모를 가르쳐 달라.

- 71 한눈에 보는 KEDI 50년 연구**
 한눈에 보는 KEDI 50년 연구·사업



- 79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 50년**
 교육통계 및 주요 지표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육 50년의 변화





CEO 칼럼

앞으로의 50년, 협력의 힘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이 창립 선 돌을 맞았습니다. 교육현장과 정책을 서로 잇고, 교육현장의 혁신을 앞장서 소개하며, 교육현장의 혁신을 이끄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교육개발>이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통권 224호를 발간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정책 연구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공동'연구의 축적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연구는 연구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동연구는 주어진 작업을 분담하여 효율을 높이는 분업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연구는 작업 분담을 통한 개인 과업의 합보다는 상호 간의 곱과 유사합니다.

곱은 함께 한다고 하여 저절로 혹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돌과 갈등을 통해 얻어지는 편입니다. 각기 다른 관점과 생각이 부딪치고 충돌하는 가운데 서로 응답하면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공동연구자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의 비판적 토론, 우연한 제안은 덤이 되기도 하고 때로 내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장은 덤을 키우고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직에는 이러한 믿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성장은 상호 신뢰에 기초합니다. 타인이 상처받을까 봐 비판을 주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서열과 권위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격식에 신경을 쓰는 관계에 머문다면, 개인도, 조직도 발전이 어렵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조직 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다양성이 창의성의 토양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공동연구는 다양한 개별 연구자들과의 상호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창의적 결과를 산출합니다. 다양성은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 전문가는 물론 교육학 이외의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은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학은 교육학 이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학 분야 전문가들은 증가하였고, 연구의 물질 기반도 확충되었습니다. 교육전문성을 이유로 교육학 분야 내 교류 협력을 넘어설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육현상은 제도적·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타 분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교육 연구자들이 그들만의 소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타 분야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폐쇄 회로에 갇히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를 통해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정책화되어 교육현장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안정화되어 사회의 변화에 상응하여 변해야 할 것들이 변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며 교육 내부의 정책 대안을 넘어 제도의 변화가 왜 어려운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계 내는 물론 외부와의 협력 역량과 변혁 역량을 키우고 발휘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비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파워인터뷰

미국 윌리엄 T. 그랜트 재단 아담 가모란(Adam Gamoran) 이사장과의 만남

아담 가모란(미국 윌리엄 T. 그랜트 재단 이사장)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 지난 8월 25일(목)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미국 윌리엄 T. 그랜트 재단의 아담 가모란 이사장을 만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교육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교육형평성 강화를 위한 우리 교육의 역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아담 가모란(Adam Gamoran) 이사장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미국의 자선 단체인 윌리엄 T. 그랜트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아담 가모란 이사장은 과거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육정책학의 John D. MacArthur 석좌 교수를 맡았으며, 30년 동안 교육불평등과 학교 개혁에 관한 연구에 몰두해 왔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교육과학위원회에 두 번 임명되기도 했다.

“ 불평등 감소를 의제화하는 것은 사회과학자들의 관점을 불평등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함 ”

류방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개발 독자분들을 위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담 가모란 안녕하세요, 교육개발 독자분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교육형평성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류방란 2013년부터 윌리엄 T. 그랜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윌리엄 T. 그랜트 재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재단의 역할과 기능, 2022년 교육 관련 주요 의제와 향후 과제를 포함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담 가모란 뉴욕시에 본부를 둔 민간 자선단체인 윌리엄 T. 그랜트 재단은 큰 체인점을 운영하던 윌리엄 T. 그랜트 씨에 의해 193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랜트 씨는 사회과학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윌리엄 T. 그랜트 재단의 운영 목적은 미국의 5~25세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불평등 감소와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증거 기반의 정책 및 이행 활용 개선이라는 두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단은 교육, 아동복지, 주거, 이웃, 사법제도 등 청년들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연구의 절반 가량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의 불평등 감소를 위하여 재단은 교사의 인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연구, 교사의 내적인 편견을 줄여주는 연구, 학생들의 인종 및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연구 등 인종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여러 연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지도자들이 연구 기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 증거 기반의 정책 및 이행 개선을 위한 연구-이행 파트너십의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 등 증거 기반의 교육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감소를 의제화하는 것은 사회과학자들의 관점을 불평등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불평등은 주로 불평등의 심각성, 불평등의 근원, 불평등이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제 전공인 사회학에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을 구축하고 시험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학의 역할을 다룬 미국 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의 오픈 액세스(open-access) 저널인 Socius의 특집 편집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사회학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저자인 토마스 디프리트(Thomas DiPrete)와 브리트니 폭스 윌리엄스(Brittany Fox-Williams)의 논문들 및 앤드류 날라니(Andrew Nalani), 히로카즈 요시카와(Hirokazu Yoshikawa)와 프루던스 카터(Prudence Carter) 등 특집 논문들은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과학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 불평등과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한,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평등과 인종차별의 구조적 근간을 뒤엎음으로써 불평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더욱 과감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Socius의 특집에 게재된 네 개의 논평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지원한 증거 기반의 정책 및 이행 활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어려움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시의적절하지 않았고, 관련성과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증거 기반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여러 연구 및 우리 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증거 기반 활용의 '사회적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해 증거 기반의 활용이 연구자와 교육 지도자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연구를 전달하는 싱크탱크나 옹호 단체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교류할 때 의사결정에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학교와 학교 또는 주별 교육부 간의 연구-실무 파트너십은 이러한 관계를 지원하고 증거 기반의 활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류방란 불평등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근거에 기반해 제안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의 역할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사장님께서 특히 젊은 세대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혹시 자녀분이 계신다면 실제 가정에서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부모님이신지도 궁금합니다.

“ 연구와 연구 후원을 통해 미국 전역의 모든 어린이에게 혜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



아담 가모란 사회학자라면 누구나 사회를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겠지만, 제가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교육이 사회학에서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은 우리 가족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두 교육자이셨기에, 제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고, 한 명은 공립대학, 한 명은 사립대학,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두 학교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섯 명의 손녀가 있고, 4살 된 큰 손녀딸은 이제 막 “public 4K”로 알려진 유치원 전 프로그램에 입학했습니다.

저와 내내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통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연구에 대한 후원을 통해, 저는 미국 전역의 모든 어린이에게 이러한 혜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 불평등은 항상 미국 교육의 핵심 문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불평등 현상은 훨씬 더 악화 ”

류방란 이사장님은 교육사회학을 전공하셨고, 그동안 교육불평등과 학교개혁에 초점을 둔 연구를 많이 수행하셨습니다. 불평등은 항상 미국 교육에 있어 중심 이슈였고, 경제 분야에서의 불평등, 취약계층(약자) 등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불평등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화되었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으로 초래된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는 많은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현재 교육 격차 및 교육불평등 현황과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담 가모란 오늘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려면, 질문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불평등은 항상 미국 교육의 핵심 문제였고, 코로나19의 유행과 미흡한 대처 방식으로 인해 불평등은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제시된 훌륭한 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육 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청년들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에도 끔찍하고 불행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19는 어린이, 가족, 그리고 교육자들이 전례 없는 스트레스를 겪게 했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미국의 2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나 보호자를 잃었습니다.

별개의 두 학회에서 북서부 교육협회(Northwest Education Association)의 학력 성취 측정 평가(Measures of Academic Progress)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업성취도가 낮아졌으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건 쿠흐펠드(Megan Kuhfeld), 제임스 솔랜드(James Soland), 그리고 케린 루이스(Karyn Lewis)는 2021년도의 학업성취도를 코로나19 이전 해와 비교했을 때, 수학의 경우 표준편차의 약 25%, 독해의 경우에는 표준편차의 약 15%만큼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연구 패널 데이터 분석 센터(Center for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in Education Research)의 댄 골드하버(Dan Goldhaber)와 동료들 또한 학업성취도의 하락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이미 낮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취도가 더 급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 밀집 지역 학교 3~4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기대보다

표준편차의 40% 정도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 학교 학생들은 15%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백인 및 아시아 학생보다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그 격차는 더 컸습니다.

골드하버(Goldhaber) 등의 연구에서는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더 많이 전환될수록 학업성취도의 하락세가 심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들은 “교육 방식의 변화는 학업성취도 격차를 증가시키는 주요 동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학생들과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가 많았기 때문이며, 또한 부분적으로 이로 인해 원격수업이 다른 지역보다 해당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더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후자의 발견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취약계층 학생들의 경우 가정의 지원이 적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이 효과를 거두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안젤라 덕워스(Angela Duckworth) 등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큰 타격을 입혔고, 원격수업을 더 많이 경험한 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 심각하게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팬데믹 동안의 원격교육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재앙과도 같아 ●●

●●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과 지나친 부담으로 고통받아 ●●

류방란 한국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등교 일수의 감소가 학업성취의 불평등을 증가시켰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향후 원격교육의 활용 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코비드 세대의 교육 격차, 교육불평등 문제와 정신건강 회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장단기적 개선 방안,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담 가모란 저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원격교육이 더 보편화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동안의 원격교육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원격교육을 통해 대면수업 때보다 향상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일부 개인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대체로 많은 학생들은 원격교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학교에서의 교육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는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원격교육 전환으로 고통받은 것은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교사들 또한 원격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애를 많이 써야 했습니다. 교사들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과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서 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만큼 “교사들의 업무량이 더 많았던 적도 없고, 그에 반해 더 적은 성과를 거둔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싱크탱크 중 하나인 Education Trust는 각 주와 학교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귀중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온라인(<https://edtrust.org/strategies-to-solve-unfinished-learning>)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T. 그랜트 재단이 이 사업을 후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해당 자료들은 팬데믹에 관한 세 가지 구체적인 대응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한편으로는 학습자와 가족,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와 학교 사이의 관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은 등교하지 못했고, 간헐적으로만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학생들은 대도시 지역의 학교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및 학생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자만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ducation Trust가 밝혀낸 강력한 관계 구축의 핵심 요소로는 애정을 표현하는 것,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자녀들 학습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자녀와 가족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시야를 넓힐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튜터링’입니다. 우리는 연구결과를 통해 일대일 튜터링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다시 학업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2001년 아동낙오방지법에 따라 제공된 전국적인 규모의 튜터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표준 기반 개혁과 빈곤 격차: 아동낙오방지법의 교훈(Standards-based reform and the poverty gap: Lessons from No Child Left Behind)』이라는 책에서 해당 내용을 집필하였습니다.



아동낙오방지법에 따라, 튜터링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시행 결과는 형편 없었습니다. 튜터가 살피야 할 그룹의 규모가 너무 커 튜터들은 담임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튜터와 학생 간의 관계는 지속적이지 못하고, 학생들의 결석도 잦았습니다. 그렇기에 팬데믹에 대응하여 튜터링을 확대하려면, 우리는 지난번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이미 과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튜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교사들에게 이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을 대신하여 임무를 맡을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전국 튜터단(National Tutoring Corps)'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전략은 팬데믹 동안 뒤쳐진 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습 시간 확대입니다. 물론, 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모델로는 방과후수업, 썸머 스쿨, 연중수업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략들이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동안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존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와 유사한 불평등 현상이 표출되었는지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스트레스와 학업중단(unfinished learning)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도, 관계 형성, 낙오된 학생들을 위한 튜터링, 그리고 학습 시간 확대라는 세 가지 전략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자, 학습자, 그리고 가족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한 많은 스트레스로 고통 받아 ”

“ 팬데믹 대응 때문에 유발된 번영 격차 발생 ”

류방란 학력 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 중 한 측면일 뿐이고, 훨씬 더 심각한 것은 학습자, 가족, 교육자 모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건강 문제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담 가모란 교육자, 학습자, 그리고 가족들은 건강 문제, 실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봉쇄로 인한 고립의 부정적인 영향 등 코로나19가 초래한 많은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니콜 라신(Nicole Racine) 등은 2021년 메타분석을 통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팬데믹 동안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원격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2020년 가을, 안젤라 덕워스(Angela Duckworth) 등은 가족들이 고등학교에서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한 학군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들은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면으로 참석한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웰빙의 수준도 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들은 이것을 팬데믹 대응 때문에 유발된 '번영 격차(thriving gap)'라고 보고했습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 교사들이 팬데믹 기간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감정적으로 고군분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은 항상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심한 직업이었지만, 팬데믹 기간에 교사들에게 요구된 중압감은 매우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보건, 경제, 인종차별,
기후 위기까지 네 가지 위기에 직면 ”

“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변화 필요 ”

류방란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모든 국민의 삶을 변화시켰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현장의 모습도 일시에 바꿔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육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교육으로의 대전환에 대한 요구도 높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미래사회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담 가모란 저는 변화에 찬성합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교육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향해 진정한 발전을 이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네 가지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네 가지 위기에는 바로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보건의 위기, 일자리 감소, 직장폐쇄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촉발된 인종차별의 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는 기후 위기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다시 학교와 교실로 돌아갈 때, 이 네 가지 위기를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백신과 치료법이 우리가 건강보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위기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첫째, 미국은 인종 차별과 불평등의 역사에 대해 정직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교육에서는 우리 역사의 많은 수치스러운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다. 여러 지역에서는 이제 더 큰 개방성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과거를 직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개방성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인종차별 반대 교육을 계속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은 학교에 대해 더 평등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K-12 교육 자금의 대부분은 해당 지역 및 주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매우 불균등하며, 이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자원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원을 평준화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며,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대학 또는 진로 준비'를 돕는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즉, 모든 학생들은 대학이나 직장에서 다음 단계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뒤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일부 대학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은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공공의 중·고등교육이 최전선에서 더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학생이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 문해력을 기를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구 및 대기 과학, 생물학 등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킨다면 젊은 세대들이 기후 변화가 왜 그렇게 시급한 문제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권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제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들은 9살 때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보이지만, 13살이 되면, 해당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과학교육 시수가 너무 적으며, 중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의 수도 매우 적습니다. 더 효과적인 과학교육과 학습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더 활발한
국제적 참여와 교류를 통해
한국교육 시스템의 통찰력을 전 세계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류방란 끝으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중 50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담 가모란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참가자로서, 그리고 2018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교육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중요한 역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류방란 원장의 발표를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정책이 어떻게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에 이바지함으로써 관성과 변화의 장벽을 극복하겠다는 목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 싱크탱크가 되려는 포부와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국제적 참여와 교류가 필요합니다. 즉, 한국으로 해외 연구진을 초청하는 것 외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진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학술 커뮤니티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분산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전 세계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세계적인 싱크탱크로서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Profile

아담 가모란(Adam Gamoran) 미국 윌리엄 T. 그랜트 재단 이사장

아담 가모란 이사장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자선 단체인 윌리엄 T. 그랜트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두 연구 주제는 청소년 불평등 감소와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증거기반의 정책 및 이행 활용 개선이다. 아담 가모란 이사장은 과거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육정책학의 John D. MacArthur 석좌 교수를 맡았으며, 30년 동안 교육불평등과 학교 개혁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그의 최근 저술에는 '사회적 자본과 학생 성취: 중재 기반 이론 실험(Social Capital and Student Achievement: An Intervention-Based Test of Theory, Sociology of Education 2021, Hannah Miller, Jeremy Fiel, Jessa Valentine)'과 '고등교육의 미래는 사회적 영향이다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is Social Impac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2018'와 같은 정책 성명서 등이 포함된다. 2021-2022년, 아담 가모란 이사장은 미국국립과학원, 공학원, 의학원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IES 교육 연구의 미래: 평등 지향 과학 발전 The Future of Education Research at IES: Advancing an Equity-Oriented Science, National Academy Press, 2022'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의 연구 기여는 공공 정책 분석 및 관리를 위한 협회(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미국교육학회(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및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의 교육 사회학 부문에서 영예를 안았다. 아담 가모란 이사장은 국립 교육 아카데미와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교육과학위원회에 두 번 임명되었다.





포토갤러리

사진으로 보는 KEDI 50년





1970~

새로운 교육 체제 개발

1972년 설립 이후 한국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교육 체제를 개발하며,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교육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교육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 프로그램들을 일선 학교현장에 적용시켜 우리 교육이 성장, 발전하도록 도왔습니다.

- 1972. 8. 초·중등 교육발전사업(E-M Project)추진 수행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초대원장 이영덕 전 국무총리)
- 1973. 3.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법률 제2616호) 제정·공포
- 1974. 3.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및 개교
- 1979. 1.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



1980~

교육 개혁의 주도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연구 및 사업 영역을 보다 폭넓게 확장하였습니다. 교육과정개발센터(CDC)의 기능이 활성화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982년부터는 3년간 2000년을 향한 국가발전장기구상 중 교육 및 인력개발 부문의 국가발전 구상에 참여해 2000년대 우리 교육의 모습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 1980. 9. TV고교 교육방송 KBS-TV, MBC-TV 통해 방송 개시
- 1981. 2. UHF 교육방송 개국
- 1982.12. 우면동 신관 청사 증축 준공
- 1981.12. 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기관으로 지정
- 1987.12. 교육개혁의 산실, 교육개혁 심의회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1988. 2. 컴퓨터교육연구센터 설치, 운영



1990~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

1990년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가 강조되면서 교육현장을 중시하는 교육정책 연구와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교육정책에서 학교평가 기능이 강조되면서 학교평가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이 강조되면서 학점은행제를 도입하고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 전국의 평생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였으며, 교육통계사업도 새롭게 수임받아 추진하였습니다.

- 1990.12.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 설치
- 1991.11. 교육방송 송출업무 KBS로부터 인수, 교육방송이 자체 송출 개시
- 1992. 6. UNESCO-IIEP와 '교육, 고용 및 인간자원 개발' 국제워크숍 개최
- 1995. 8. OECD 한국교육정책평가 조사단 방문
- 1996. 6.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설치
- 1997. 1. 「부설 교육방송(EBS) 및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분리·독립
- 1997.10. 직업기술교육연구 기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분리·독립
- 1997.12. 교육과정연구·개발 기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분리·독립
- 1997.12. 「교육통계센터」 기능 수임
- 1999. 1.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 1999. 6. KOICA와 아프리카, 아시아 정부관리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육정책에 관한 국제연수 실시



2000~

인재대국·선진일류교육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와 교육행정 체제 연구를 강화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뒷받침할 교원역량 개발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새로이 수행하였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수월성교육과 영재교육을 위한 연구에도 연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인재평생교육 정책,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협동연구도 외연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 2000. 3. 평생교육센터 출범 및 헌판식 거행
- 2002.12. 「영재교육연구원」 주관기관으로 지정
- 2005. 6.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EDUEXPO 2005) 개최
- 2006. 5. 「교육시설간담투자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
- 2008. 2. 평생교육센터 및 학점은행 운영 기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분리·독립
- 2009. 8.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및 「교과교실제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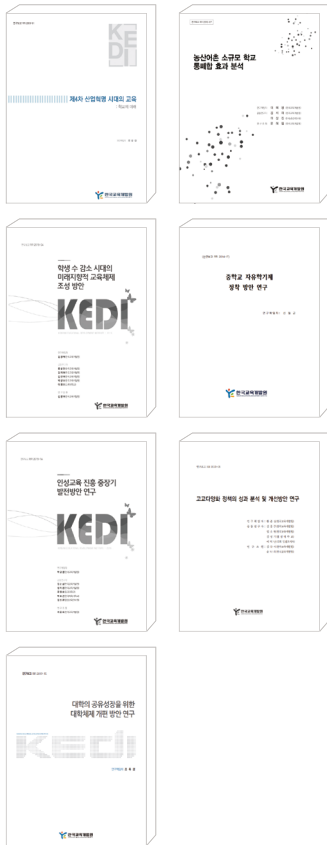


2010~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연구 수행

한국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일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선진국들과 역량중심의 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에 관한 연구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들과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나누는 교육협력활동도 더욱 넓혀 가고 있습니다. 시대격변기를 맞아 학습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학교 및 교육 체제의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2010. 5. 고교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및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
- 2010. 7. 「Wee프로젝트연구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
- 2011. 1.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
- 2012. 1.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전문기관 지정
- 2012. 7.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 전문기관 지정
- 2012.11.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운영
- 2012.11. UNESCO 교육통계 협력기관 지정
- 2013. 4.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지정
- 2014. 1.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준비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 2014. 6. 대학 구조개혁 평가기관 위탁 지정
- 2016. 3. 2016 행복교육박람회 주관기관 지정
- 2017. 2. 충북혁신도시로 청사이전
- 2017. 6.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
- 2019. 7.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2020~

더 나은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 개발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 동안의 교육현장 혁신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의 오래된 난제들을 넘어 더 나은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미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핵심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연구도 강화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융합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른 영역과의 정책적 공조를 위해 융합적 연구와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 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 소규모 대학 컨설팅 실시
- 2020. 6. KEDI-UNICEF 업무협약 체결
- 2020. 9.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사범대 미설치 대학) 정량진단
- 2020.10. ADB, KICE, KERIS, KRIVET, NETI 업무협약 체결
- 2020.11. UNESCO-KEDI Asia-Pacific Resonal Policy Seminar 개최
- 2021.11.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최
- 2022. 8.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KEDI 50년 성과와 과제

지나온 5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성과

정미경(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다가올 5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도전과 과제

이돈희(제10대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13인



더 나은 삶, 교육을 위한 KEDI 50년 성과와 과제



지나온 5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성과¹⁾

정미경(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1972년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시작된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년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실로 50년간의 한국교육개발원 역사는 우리나라 현대교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72년 설립 당시 원장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총 25명이었던 한국교육개발원은 50년이 지난 2022년 8월 9일 현재 533명의 직원이 상근하는 대규모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와 같은 외현적 성장뿐 아니라 방대한 양의 교육정책 연구·사업을 통해 한국교육의 혁신을 이끈 큰 성과를 나타내어 우리나라 현대교육사에 한 획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한국교육에 기여한 성과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1) 본고는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참고문헌 목록은 본고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가장 큰 성과: 연구사업 실적²⁾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 50년의 성과는 무엇보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연구업적일 것이다. 50년간 수행한 연구업적을 제한된 지면에 실는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볼 때[2022년도에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아직 출간 전이므로] 기본연구 보고서 1,337편과 수탁연구 보고서 1,611편으로 기본연구와 수탁연구만 합쳐도 총 2,948편이 된다. 기본연구와 수탁연구 외에 기술보고서와 수탁사업 내에서 수행한 연구 보고서, 수탁사업 결과보고서 및 관련 보고서, 각종 연구 관련한 연구 자료까지 합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 연구들은 ‘한국교육을 움직였으며’ 또 우리 교육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원동력이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육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연구업적을 모두 나열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어떠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왔는지 연구 분야와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업적에 관한 기술을 대신하고자 한다.

연구 분야를 크게 초·중등교육연구, 고등·평생교육연구, 국제교육연구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부 주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고교 다양화, 고교 평준화, 고교교육 선진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수-학습 모형, 교육 격차, 교육개혁(교육혁신), 교육방송, 교육복지, 교육여론조사, 교육열, 교육자치·거버넌스, 교육재정, 교육종단, 교육지표, 교육통계, 교육환경·시설, 교원정책, 교원양성교육, 국가 장학금제도, 국제연구(OECD)·교육개발협력(ODA), 다문화 교육, 대입제도, 대학 공유 체제, 대학의 교수·학습, 대학평가, 디지털 전환, 미래교육, 민주시민 교육, 방과후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 사교육 경감, 세대통합교육, 소규모 학교, 시·도교육청평가, 심리검사 개발, 영재교육, 온라인 교육, 온종일 돌봄, 유아교육, 위프로젝트, 인성교육, 인적자원개발, 의무교육제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직업교육, 컴퓨터 교육, 탈북청소년, 통일대비 교육, 평생교육,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학교평가, 학생·학부모, 학제 등이다.

이상과 같이 본원에서 수행된 연구사업 분야를 볼 때 교육 분야 전 영역에 걸쳐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연구기관의 기능분화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 연구사업 영역이 있지만 여전히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업적은 지나온 한국교육개발원 50년 역사의 가장 큰 업적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2) 지난 50년간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연구사업의 성과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사업 50년의 성과」(2022)라는 책자로 발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책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 II. 시대별로 살펴본 주요 성과

1. 1972~1979: 새교육 체제의 시작

가.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Elementary & Middle School Project: E·M Project)이 낳은 '새교육 체제'

한국교육개발원이 창립되었던 1970년대 우리 교육의 현실은 과밀학급과 그에 따른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기 어려운 교수학습 상황이었다. 플로리다주립대학교의 모건(Robert M. Morgan) 박사팀은 1970년 6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생조직과 학교조직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Elementary & Middle School Project: E·M Project)'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영덕 전 국무총리를 초대원장으로 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었으며, 1973년 3월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법률 2616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Elementary & Middle School Project: E·M Project)'이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연구팀의 보고서를 기초로 추진되었지만, 구체안을 만들고 실행해나간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진들에 의한 것이었다. 이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업인 동시에 1970년대 전반에 걸쳐 한국교육개발원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사업이었다. 그리고 이 연구사업의 결과로 산출된 것이 바로 '새 교육 체제'였다.

'새 교육 체제'에 대한 시범 사업은 소규모와 종합 시범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종합시범사업만도 1975년 9월부터 1980년 2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총 5차례 이루어졌다. 또한 관련 연구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다수 수행되었으며, 일일교사협의회, 교재분담연구제, 동학년 교사협의회, 보충 지도반 운영, 예체능부문의 교과전담 교수제, 다양한 수업시간 운영 등이 모두 '새 교육 체제'에서 수업과정의 일반 모형으로 제시된 내용들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교사용 수업지침서와 학생용 연습교재(배움책)는 학교 현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했던 당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나. 교육방송 기반 구축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Elementary & Middle School Project: E·M Project)'에서 플로리다주립대학 연구팀이 제안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TV 매체를 활용한 방송수업이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서 개발한 송신체계인 T-COM(Tethered Communication)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이 프로젝트의 원안에서는 시범학교에만 일차적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새 수업 체제'의 지원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방송,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방송, 교사교육을 위한 방송을 포함한 종합 방송 체제로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컬러방송으로 하게 되었다.

1975년 9월에 방송국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1976년 2월 말에 방송시설 설치가 완료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한 교육 프로그램을 T-COM시스템을 통해 송수신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KBS의 방송 전파를 통해 보급하였으며, 이때 축적된 노하우가 1981년 2월 UHF 교육방송 출범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및 개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3년 당시 문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연구를 위탁하면서 출발하였다. 학교교육 기회를 받기 어려웠던 1970년대 초반, 고등학교 학력 미소지로 인하여 학력에 대한 '한(恨)'을 가슴 속에 안고 있던 중장년층에게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1970년대를 거치면서 라디오 방송이 본격적으로 대중화시기를 맞이하는데 이를 통한 원격교육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은 방송·정보통신교육을 통해 중등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진학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들에게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추진되었다. 이후 2012년 11월에는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사업은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의 학업 지속 기회 제공에 대한 시급성이 인식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기회를 다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일반 학교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면대면 수업 중심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교육 소외계층에게 방송·정보통신교육을 활용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은 1954년 제1차 국가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이후 제2차, 제3차 교육과정 개정은 문교부 편수국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문교부는 국가교육과정의 개발, 고시, 국정교과서 편찬, 중·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의 검인정 및 교과서 발행까지 전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1977년 3월 17일 ‘검인정교과서 거액부정’ 사건이 보도되면서 이후 교과서 편찬 및 발행을 담당했던 문교부 편수국은 장학실에 편입되고 한국교육개발원 등 민간연구기관이 교과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문교부의 ‘검인정교과서 파동’ 이전에도 학계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개발센터(Curriculum Development Center: CDC) 설립의 필요성에 제기되었었고, 당시 EM프로젝트에서 했던 교과과 과제분석, 교과별 수업 모형 등 교과교육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있던 KEDI는 연구 기반 교과교육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개발 역량을 갖추 수 있었다. 1978년 편수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와 문교부의 기구 개편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육과정과 각종 교과용 도서의 개발 업무가 문교부로부터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위임되어 1979년 1월부터 국가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전문기관(Curriculum Development Center: CDC)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2. 1980~1989: 연구기반 국가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시작

가. 연구기반 국가교육과정 개정: 제4차 국가교육과정 개정

국가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전문기관(Curriculum Development Center: CDC)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진한 제4차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연구기반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남긴 작업이었다. 그러나 4차 교육과정 개정이 완성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국가 CDC로서의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발하였다. 이후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교육과정 개정작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학교급별로 단계적 개정을 하려던 계획이 5공화국 출범 후 7·30 교육개혁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전체 학교급의 일시적·전면적 개정으로 바뀌고, 개정의 방향도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에 과열과외 해소를 위한 교과목 수의 축소와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 축소는 정치적 이슈가 더해졌다.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4차 국가교육과정 개정작업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를 제시하면 첫째, 연구기반 국가교육과정 체제의 시작이 되었다. 둘째, 한국교육개발원이 계속 연구해왔던 교육과정 개정 방향이 반영되어 교육적 인간상으로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이후 교육과정에도 지속해서 반영되고 있다. 셋째, 기존에 일반 목표로 제시되었던 교육목표를 처음으로 학교급별 목표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넷째,

EM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되었던 다양한 교과교육 연구 결과를 교과 학습목표를 수립하는 데 반영하였다. 다섯째, 초등학교 저학년에 처음으로 통합교과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통합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과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만들어진 초등학교 1, 2학년의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나. UHF교육방송 개국

1981년 1월 12일 교육전용 방송망(UHF-TV)이 설정되었다.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내용 중에 “현행, TV가정교과 방송의 운영을 개선하여 방영 시간과 대상 과목을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는 교육전용방송을 실시한다”라고 하여 교육방송이 확대되게 되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 문교부, 문공부, KBS, MBC가 교육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교육과 학교교육에 관련된 방송을 전담 제작하고, KBS는 성인교육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송출은 KBS제3방송(UHF-TV)을 통하여 송출하되, KBS제1TV와 MBC는 재방송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유아 및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정에 근거를 둔 교과용 프로그램 제작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교사 연수 프로그램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방송통신고등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다. 컴퓨터교육연구센터 설치·운영

1980년대 후반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컴퓨터교육 강화를 건의하였으며, 제5차 교육과정에서 컴퓨터교육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정보연구실에서 컴퓨터교육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1988년 2월 문교부의 ‘학교 컴퓨터 강화 방안’에 따라 원 내에 컴퓨터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80년대 후반에 ‘CAI모형프로그램 개발연구(1985)’, ‘CAI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실험연구(1986)’, ‘CMI 모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CAI, CMI 통합 모형을 중심으로(1987)’ 등 다양한 컴퓨터보조학습(Computer-Assisted Instruction: CAI)연구를 비롯하여 1996년 말까지 개발해낸 CAI프로그램 수는 총 684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컴퓨터교육연구센터의 수많은 업적은 2022년 현재 디지털 전환 관련 한국교육개발원의 다양한 연구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다.

3. 1990~1998: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과 신규 사업의 전개

가.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

1990년대 수행된 교육정책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연구 주제도 다양해졌으며,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수탁과제도 매우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 영역을 보면 교육계획 연구, 종합적 미래교육 연구, 교육개혁 실천전략 연구, 인력수급 연구, 지역 혹은 학교교육계획 연구, 유아교육제도 연구, 초·중등교육제도 연구, 교육행정 연구, 교육자치제도 연구, 교육청 평가 연구, 교원양성 체제 연구, 교원인사제도 연구, 교원연수 연구, 교원교육 관련 기관들의 평가인정 연구, 교원정책 연구, 교육경제·재정 연구, 통일교육연구, 교육사·철학 연구, 한국인의 교육열·교육의식 연구, 학교교육 효과분석 연구, 평생교육연구, 영재교육 연구, 심리검사개발 연구, 성교육 연구, 학생이해 연구, 학습력 강화 연구, 특수교육 연구, 새로운 교육개혁방안과 학교지원 연구 등 연구 주제의 다양성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나. 6차·7차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

4차와 5차 국가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총론과 각론을 모두 개발하였으나 6차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총론을 개발하였다. 총론 개발 후 본원에서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년간

과학계·예술계·농업계·체육계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고 초·중등교육 과목별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였다. 1993년부터는 교과서 개발 작업에 들어가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교과용 도서의 약 77%, 중학교 교과용 도서의 70%를 본원에서 개발하였다.

7차 교육과정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개정을 발의하였으며, 본원에서는 총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론 개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국교육개발원은 국어, 한문, 체육, 교련, 미술, 영어, 초등 통합교과, 제2외국어 교과의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체육계·예술계·국제계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은 1998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다. 종합적인 진로·직업교육 체제 연구 수행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던 실업교육(농업·상업·공업교육)의 효율성, 효과성, 수익성을 평가하고 교육 재정의 합리적 투자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보다 종합적인 직업기술 교육 체제의 발전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학교급별로 '중학교 진로 교육 강화 방안 연구(1992)',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효율화 방안 연구(1992)', '대학단계 직업기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1992)'가 수행되었고,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기술 교육 체제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자 '직업기술교육 체제 발전방안 연구(1992)'를 실시하였다. 이듬해부터는 마스터플랜 세부 영역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연이어 수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직업기술 학제의 정립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제 개선 방안 연구(1993)', 실업고교 교육 체제의 확충 및 개편을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편방안 연구(1993)', 산·학 협동 체계 확립 및 직업기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이원화공공 교육 체제에 따른 산업체현장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기초연구(1994)' 등이 있다. 진로·직업교육 영역의 연구는 199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이관되면서 본원에서는 더 이상 연구되지 않았다.

라. 학점은행제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분화와 재편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연구, 진로·직업교육 연구, 멀티미디어교육 연구 등이 타 기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학점은행제 운영 사업과 국가 교육통계업무를 받아 새롭게 수행하게 되었다. 그 중 학점은행제는 1997년 9월 11일 공포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제19조, 제20조 등의 조항에 따라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를 본원에서 수행하게 되었고, 같은 해 9월 25일에 교육부는 본원을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으로 확정·통보했다. 학점은행제는 여러 사정으로 고등교육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 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마. 교육통계센터 기능 수입

1997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통계조사 부문 사업을 수행해 왔다. 1999년도에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교육통계조사의 시행과 분석을 하였으며, 2001년에는 인적자원 통계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졸업자 취업통계DB, 인적자원통계DB, 고등교육기관 온라인 조사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OECD교육지표 산출을 위하여 국내 교육통계 담당 기관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바.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 설치

1970년대부터 있던 교육방송은 1991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수업용 방송에서 교육 분야 전체를 다루는 방송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갔으며, 1997년에는 EBS가 독립법인으로 분리되었다.

사.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도서관 체제 구축

1990년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은 한국교육개발원 도서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 네트워크 환경과 이를 활용한 지원협력 체제 속에서 교육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미국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이용자들에게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에 없는 학술지 논문은 미국과 영국에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하여 원문을 제공하였다.

1996년 9월에는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인 KEDILAS (KEDI Library Automation System)을 개통하여 도서관에 방문해야만 소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연구실에서도 검색 및 대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CD-NET을 설치하여 원내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연구실에서 ERIC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1999~2008: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의 정체성 확립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재편에 따른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교육 분야 전 영역에 걸쳐 수행해왔던 연구사업들 중 일부 영역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본격적으로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을 공포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지원·육성·관리를 위한 5개 연구회를 설립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은 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구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본격화되고 조직 운영의 탄력화·개방화·고집적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나.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로 선정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년 12월 한경비즈니스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중에서 정치·사회·복지·교육 분야 1위에 선정되었다. 선정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교육제도, 평생·고등교육연구 등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수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7년 1월에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영문 저널 KJEP(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이 사회과학 논문 인용 색인(SSCI)에 등재되면서 연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는 국내 저널로는 10번째이며 대학이 아닌 순수 연구기관 저널이 등재된 것으로는 최초의 사례였다.

다. 평생교육센터의 출범

교육개혁위원회는 제4차 교육개혁 방안(1996.08.20.)을 통해 교육부 산하에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교육 실천 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계좌제도의 기획, 사회교육연수, 사회교육 종합 연구, 평생교육 학술자료·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라고 건의했다. 이러한 공식적 건의는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1998년 8월 「평생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어 교육부는 2000년 2월 15일에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센터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했으며, 2000년 3월 29일 본원의 평생교육센터가 출범했다. 평생교육센터에서는 2008년 2월 15일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기 전까지 다양한 평생교육관련 연구와 평생교육 연수사업을 수행하였다.

라. 국가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제1단계 영재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영재교육 활성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영재교육진흥법」이 만들어져 2000년 1월에 이 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2002년에는 교육부가 본원을 국가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본원에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허브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마.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

2006년에는 '교육시설의 선진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원에 국내 최초로 교육시설 민간투자(BTL)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를 두게 되었다. 2009년부터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교과교실제, 교육환경평가, 학교용지 및 무상공급, 학교시설 섹테드(CPTED), 학교안전,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명을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사업 등은 교육시설의 선진화와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의 저변 확대와 고품격화에 기여하고 있다.

5. 2009~2016: 월드클래스 교육정책연구 기관으로의 부상

가. 글로벌 교육연구 중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0년대부터도 OECD와 다양한 연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11년 글로벌교육협력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3년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을 출범시켜 국제교육개발협력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08년부터 3년 동안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형 교육협력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011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교육을 통한 세계개발원조: 원조에서 개발로'라는 주제로 국제교육 ODA포럼을 개최하여 교육을 통한 발전과 개발협력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2012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 기관으로서 경주에서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를 개최지원하였으며, 2013년 11월 26일에는 '글로벌 교육협력을 위한 발전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2014년 6월 24일에는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전략을 논의하고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발전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교육ODA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2014년 11월 4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한국·세계은행 교육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2015 세계교육포럼'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2015 세계교육포럼'행사 전반을 지원하였다.

이 당시에 다양한 기관들과 국제 MOU를 체결하였는데 2011년 11월 24일에는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 중국 교육과학연구소(NIES)와 교육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5월 21일에는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SEAMEO)와 MOU를 체결하였다.

나. 공교육의 책무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 추진

이 시기에는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연구와 교사 연수 및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였다. 2009년 3월 20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으로 확대·수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자유학기제의 본격적 확대를 위해 본원이 2013년 4월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1월 20일에는 정부가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본원이 인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본원에서는 2005년부터 학교폭력 관련 연구를 계속 수행해 왔는데 2012년 7월 6일에는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당시에 사업주관 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중 2022년 현재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0년 1월 시·도교육청 평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제고,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시작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10일에는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도입되어 2011년 1월 18일 본원이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 5월에는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8월 1일에는 위(Wee)프로젝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2009년에 교육부는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25일에 본원을 교과교실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009년 8월 10일에는 본원이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탈북학생 교육지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탈북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고, 교사역량을 강화하며,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활동을 활성화해 온 것이다. 이런 성과를 드러내 주는 지표로는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이 있는데, 2009년 6.1%에 달했던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은 2021년에 1.2%로 낮아졌다.

다. 고등·평생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진단·평가 전문성 증진

교육부가 2014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을 대학 구조개혁 평가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본원에서 이와 관련된 후속 진단·평가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매개로 우리사회의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진단·평가 분야 연구 전문성을 강화한 점이다. 둘째는 2015년부터 지속된 대학 평가 및 진단 전문기관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단위의 평가 운영 체제의 본보기 상을 정립하였다. 셋째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대학 맞춤형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고등·평생교육의 국제경쟁력 증대, 고등·평생교육 학습 성과 분석 및 제고, 대학평가 및 질 관리에 관한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다.

6. 2017~2022: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연구 선도

가. 충북혁신도시 신청사 준공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충북 진천군 덕산읍 소재 충북혁신도시에 2015년 8월 3일 신청사를 착공하여 2017년 1월 13일 준공을 마치고, 2017년 4월 20일에 진천 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청사 이전에 따라 본원은 충북 도내 지역주체와 진천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본원이 전국 최초로 협력·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된 서전고등학교가 2017년 5월 24일 개교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방균형발전 시대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교육적 대응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생활과 사교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향후 이와 유사한 감염병 확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제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에는 코로나19 첫 환자 확진 판정을 받았던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에 따른 주요 조치들과 관련 사진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2장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를 3장에는 교육 분야의 대응 과정과 주요 교육 현안들을, 4장과 5장에는 정부의 대응 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현황 분석(2020)’연구,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2020)’등을 수행하였으며, 팬데믹으로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국가 수준 원격교육 체제 진단 및 과제(2020)’,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 연구(2020)’ 등을 수행하였다.

다.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 연구 수행

한국교육개발원은 창립 당시부터 계속해서 미래지향적 교육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 초·중등교육영역(2016-2017)’,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2018)’,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교육 실태 및 대응방안(2018)’,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1):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2018)’, ‘교육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2019)’, ‘새로운 학력관에 따른 고교 체제 연구: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2020)’,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 교육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 체제의 대전환 방안(2020)’, ‘공교육 혁신을 위한 탄력적 교육 체제 운영 방안: 통합운영학교 도입을 중심으로(2021)’, ‘인공지능시대의 영재교육: 변화 전략 탐색(2021)’,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2021)’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고교학점제 운영 고교에서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실온달’이라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스쿨포유(www.s4u.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e-School(www.e-school.or.kr)’을 운영하고 있다.

라. 고등·평생교육 혁신 연구 수행

학령인구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등교육 분야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기반이 되는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제시하면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2017-2019)’,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 방안 연구(201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 방안 연구(2020)’,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2021)’ 등이다.

또한 고등교육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이 수행되었는데, 2015년부터 시작된 ‘대학교구조개혁평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계속 수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보면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 고등교육영역(2016-2017)’, ‘대학교육 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 분석 연구(2020)’,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2018-2021)’,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 방안 연구(2019)’,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2019)’,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 분석: 재정 여건 및 지출 변화를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 고등교육의 뉴노멀과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이를 보면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고등평생직업교육의 과제와 미래 방향(2019)’,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방안 연구(2019)’,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

마. 빅데이터 기반 교육연구 체제 수립

데이터 기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분야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정책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양질의 교육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연구 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2022년부터 기존의 '교육통계연구본부'를 '교육데이터연구본부'로 개편하고, 데이터전략실을 신설하여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본원의 교육통계센터에서는 교육통계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2017년에는 본원 교육통계센터가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되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는 유·초·중등교육 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 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교육·취업·평생교육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 같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열람할 수 있는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을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II. 월드클래스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국제교류 성과

한국교육개발원은 창립했던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날리던 교육정책 연구기관이었다. 1978년에는 영국의 브리태니커사에서 선정·발표하는 세계 10대 교육연구기관에 본원이 선정되었으며, 1970년대 당시에도 UNESCO 산하 프로그램인 아시아교육발전혁신프로그램(APEID)에 참여하여 국제회의 개최, 교육혁신 사례 보고서 출간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왕성한 교류를 하였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의 중점 지원 대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진단 및 협력방안 등을 지속해서 연구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국무조종실 ODA 기술협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세계 200여 회원국의 2만여 명이 참석하는 유네스코 세계교육총회가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또한 2016년 이후로는 UN이 새롭게 제안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전략을 통해 글로벌 교육개발협력 방안으로 발전했으며, 2017년부터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협력방안을 기초교육, 직업기술교육훈련, 고등교육, 교육형평성 지원, 문해교육, 지속가능발전역량지원 등 6개 단계로 구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2016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개도국 스스로 교육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각국의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발표하였다. 2018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유네스코 방콕아태지역 사무소와 공동으로 '안전한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2018년 11월 29일에는 '교육형평성과 삶의 질: 현실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2018 한-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와 함께 '2021 UNESCO-KEDI 아태지역 정책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2022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18개국/행정구에 소재한 30개 정부, 국제지역기구, 연구기관 등과 활발한 교육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바탕으로 해외기관 방문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나라 교육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한편 ODA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 <표 1>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제교류 현황 •

국제·지역기구 및 정부	연구기관 및 단체
 아시아개발은행(ADB)	 뉴질랜드 교육평가청(ERO)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EAPRO)	 러시아 교육아카데미(RAO)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SEAMEO)	 러시아 교육아카데미 심리학연구소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 교육혁신기술지역센터(SEAMEO INNOTECH)	 미국 국가평가연구소(CRESST)
 우즈베키스탄 국무조정실 산하 교육사찰기관	 베트남 교육과학연구소(VNIES)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아프리카 교육발전기구(ADEA)
 유네스코 본부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
 이베로아메리카국가기구(OEI)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KAERA)
 태국 국가교육위원회(ONEC)	 중국 국립교육과학연구원(NIES)
대학	 프랑스 국립교육개발원(INRP)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피라말재단교육리더십(PEEL)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호주 평생교육센터(ALA)
 북경사범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아블로니원
 인도 국립교육계획관리연구소(NIEPA)	 라니아왕비 교육아카데미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태국 스리나카린위롯대학교	
 홍콩교육대학교(EduHK)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2c). 한국교육개발원 브로슈어. p. 19.

— IV. 사회 각계에서 인정한 한국교육개발원

외부에서 바라본 한국교육개발원의 모습은 어떠할까? 주요 언론에 비친 한국교육개발원의 모습 중 연구내용에 대한 보도 기사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한국교육개발원을 교육혁신의 중심 기관으로 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초·중·고교육 개선의 시추 교육개발원’(1972년 4월 1일자 동아일보), ‘교육혁신의 첨병 한국교육개발원’(1973년 4월 16일자 동아일보), ‘교육개발원, 새수업 체제 개발’(1974년 2월 8일자 동아일보), 『성장사회』 초석 양성에 주력-교육개발원, 장기종합교육 청사진 제시(1978년 11월 23일자 경향신문), ‘교육개발원 새교육과정 개발’(1986년 1월 23일자 매일경제), ‘교육발전 공헌 교육개발원 제2회 코메니우스상 수상’(1994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 ‘교육개발원, 교육혁신 우수연구기관상 수상’(1997년 12월 3일자 조선일보) 등이다.

사회 각계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성과를 인정해 주는 사례는 많지만 여기서는 지난 50년 간 한국교육개발원의 주요 수상 실적으로 이를 대신하고자 한다.

• <표 2> 한국교육개발원 수상 내역 •

수상연도	수상내역
1978. 10	영국 브리태니커사로부터 세계 10대 교육연구기관으로 선정
1992. 10	세종문화상(교육부문) 수상
1994. 10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체코공화국 교육부가 수여하는 Cmenius상 수상
1997. 12	아·태지역 교육혁신센터 교육부문 우수상 수상
2008. 11	영문저널 「KJEP」 SSCI등재
2008. 12~ 2009. 12	‘한경비즈니스’가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중 정치·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
2010. 02	한국도서관협회가 수여하는 제42회 한국전문도서관상 수상
2010. 09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여하는 최고상인 국무총리상 수상
2012. 11	통계청 주관 통계개선 최우수기관 선정
2013. 11	제25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사사(社史)부문 우수상 수상
2014. 06	2014 고객중심경영 대상(서비스부문) 수상
2014. 11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수상
2017. 09	통계청 통계의 날 기념 대통령상 수상
2019. 11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2020. 09	한국교육개발원 기관 웹사이트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브로슈어(2022c). p. 7.

지나온 5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루어온 성과를 이 지면에 모두 담아내기에는 필자의 역량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 ‘한국교육’, 그 한국교육을 움직인 ‘한국교육개발원, KEDI의 노력과 그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KEDI 동문들과 직원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나온 50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가올 50년을 준비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교육개발원(2012). 한국교육의 싱크탱크, 백년대계를 디자인하다. 한국교육개발원 40년.
 한국교육개발원(2016). 한국교육정책의 회고와 전망: 기술사적 접근 시도.
 한국교육개발원(2022a).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사업 50년의 성과.
 한국교육개발원(2022b).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
 한국교육개발원(2022c). 한국교육개발원 브로슈어.

다가올 5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도전과 과제¹⁾



- 한국교육의 발전과 이념적 기반에 관하여
-민주주의, 자유교육, 그리고 국민교육의 관점에서- **이돈희**
- 미래의 한국과 KEDI의 연구과제 **윤정일**
- KEDI 50년: 역사는 역사를 낳고 **이중재**
- 나라를 구하라
-개발원 앞으로 50년을 위한 상상력- **곽병선**
- KEDI의 교육행·재정 미래 연구방향 전망 **김흥주**
-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교육 평가 혁신의 방향 **박도순**
- 선발과 평가-고교, 대학, 대학원을 중심으로 **안건훈**
- 교육개혁, 국가 발전의 동인(動因) **서정화**
- KEDI의 세계 10대 교육정책연구소 재도약을 기대하며 **김재춘**
-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체성과 역할 **진동섭**
-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더 큰 도약을 기원하며 **반상진**
-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서 요구되는 인간상 설정을 위한
KEDI 발전 방향 제언 **김정래**
- 교육에서의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KEDI의 연구과제 **강인수**

1) 본고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기념 문집 'KEDI 지나온 50년, 앞으로 50년'(한국교육개발원동문회 발간, 2022.8.30)에 수록된 원고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임.

한국교육의 발전과 이념적 기반에 관하여

-민주주의, 자유교육, 그리고 국민교육의 관점에서-

이돈희(제10대 한국교육개발원장,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교육부 장관)

이 글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에 관한 논의의 상황에 있다면, 마땅히 언급하거나 비추어 볼 기본적인 가치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자유교육, 국민교육의 개념이 교육 발전의 담론에서 어떤 가치론적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주의의 개념은 그 자체로서 국가적 교육이념을 포괄하는 표상적 가치이며, 둘째 자유교육은 교육의 중핵적·본질적 가치의 보루에 해당하고, 셋째 국민교육은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교육현장을 제도적으로 표상하는 구체적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경우에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개념들을 포괄하여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단지 교육의 가치론적 담론을 위한 예비적 걸음의 시도임을 밝혀 둔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분야나 현상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한 '패러독스'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조건과 실천적 원리 그 자체에서 요구되는 다원주의적 특징으로 인한 것이다. 개방적인 다원주의적 체제에서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체제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세력 혹은 신념이 체제 속에 함께 기식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의 현장에서 요청되는 자유교육의 원리와 국민교육의 이념이 서로 일관성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는 가치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엄격히 진리를 추구하는 자유교육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교육현장과 현실적으로 존속하는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지향하는 국민교육은 때때로 서로 상충하거나 경쟁상태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둘째, 민주주의는 애초에 시민국가의 정치제도인 민중정체로 출발한 것이지만, 의사결정의 절차주의, 집단의 구성원이 함께 속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적 바탕을 중시하는 집단적 협의주의,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상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상황을 함께 해결해 가는 생활양식의 수준으로 그 의미가 진화해 왔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에서도 민주주의는 자체의 실체와 존속을 위협하는 패러독스적 요소들을 청산하지는 못하였다. 관점을 달리하여 검토해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은 패러독스의 상황적

발생을 회피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사회적·교육적 학습의 장을 충실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패러독스의 상황에 대한 개방적 대응은 생활양식의 수준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적 삶의 개념적 이해, 비판적 사고, 균형적 정조(情操), 실천적 습관의 형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장을 기하는 데 효율성 높은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활양식으로 이해되는 민주주의는 만민에게 유의미한 성장의 삶을 지향한다.

끝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발전적 과제에 관하여 언급하면, 비록 한국교육개발원이 한국교육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던 시기에 비하면 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시점에서 연구의 전문적 분업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벌써 약 30여 년 전인 당시에 전문적 분업은 교육방송, 교육과정평가, 직업능력개발, 교육정보화, 평생교육 등의 범주에서 진행되었다. 그때 원장이었던 나는 마치 셰익스피어의 리어왕과 같이 초라한 모습을 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았으나, 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의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발생한 연구수요의 폭증을 예상하였다. 교육정책의 연구는 분업한 분야의 작은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한국교육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연구역량의 전문화를 요청한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한국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미 선진국의 수준에 있고, 교육개발원은 국내·외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연구기관의 자리를 차지한 연륜도 오래되었다. 물론 개발원은 정부와 현상이 요구하는 한국교육의 성장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실히 봉사할 필요는 여전히겠지만, 우리 교육의 발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전략과 성과를 기획하고 검토하는 데 선도적 과업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감당하는 위치를 더욱 고양시킬 필요는 있다. 특히 우리 교육에서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이념적 기반과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성찰적 연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육과 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는 데는 엄격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철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

미래의 한국과 KEDI의 연구과제

윤정일(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전 KEDI 기획실장, 교육발전연구부장)

KEDI는 앞으로 연구과제를 개발하거나 수주함에 있어서 확실한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적이고 단기적인 연구나 개인적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연구보다는 국책연구기관에 걸맞게 국가 수준의 장기적이고도 파급효과가 큰 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연구나 단기간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보다는 대규모의 연구과제를 장기간에 걸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유리하도록 평가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단독연구보다는 집단연구, 단기간의 연구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 지역적인 연구보다는 국가 수준의 연구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평가 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제 선택 기준에 비추어 KEDI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 추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인구 증가책

인구감소 문제는 특히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 각 부처 산하의 국책연구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인구감소 추세가 증가 추세로 역전되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개발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수행하여야 한다.

—— 통일 후의 교육 대책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었을 때를 각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대책안이 필요하다. 먼저,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한 공용 한글사전을 편찬·보급하고, 역사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역사 자료집을 발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비하여 교육법규 정비, 학제의 통일, 교사교육 기관 통합, 교육내용 선정과 교과서 체제 정비, 남북 간 학생 및 교사 교류 등을 포함한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통일대비 교육 대책의 연구는 남북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통일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할 장기과제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대학입시제도 폐지

인구감소 문제, 인구의 대도시 집중, 사교육비 지출의 증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바로 대학입시로부터 초래되고 있다. 실험 실습 등 대면 출석 수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강의를 모두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는 그 필요성이 상당히 감소하고, 대학별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대학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학생 정원이 없고, 따라서 입학시험도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교수의 강의를 들어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면 되는 혁신적인 제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농산어촌 학교 유지책

교육재정 투자의 비효율성과 소규모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제약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을 반대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은 통학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공간이 사라져 농산어촌의 공동화현상을 촉진하며, 거주민들을 인근 도시나 대도시로 이주시켜서 지역의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주민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은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학교를 유지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 대책 수립에 KEDI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이념 갈등 해소

우리 교육에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없으며, 공통적인 지향점이 없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현장에 이념갈등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역사 교육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핵심은 건전한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배양하고 민족적 긍지를 육성하는 데 있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역사를 더 많이 공유하고, 공유된 역사는 국민을 더 애국적이게 만든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가 통합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KEDI 50년: 역사는 역사를 낳고

이종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제12대 한국교육개발원장, 전 KEDI 교육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KEDI가 걸어온 지난 50년의 여정은 놀라운 성취의 여정이었다. KEDI는 '과밀학급 상황에서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으로 시작하여 국가의 교육 발전을 설계하는 싱크탱크로 성장·발전하였다. 경제 분야의 KDI, 과학기술 분야의 KIST와 함께 교육 분야의 KEDI로서 우리 사회에서 '발전'을 탐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KEDI와 함께한 시간은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과의 연결과 연대를 느끼게 한다. 지난 50년의 KEDI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갈 KEDI 50년의 여정을 떠올려 본다. 지나온 50년의 역사는 내일을 바라보는 디딤돌이 되고 그 위를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가야 할 50년'이 이루어질 것이다.

— 중점연구계획(Research Programs)의 설정

KEDI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구계획과 사업계획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KEDI는 '중점연구·사업계획'으로 부르고 있다. KEDI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원,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처,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대처, 국가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주제를 중점연구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사업을 KEDI가 연구 및 사업을 설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다음과 같은 6개의 주제를 중점연구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학교교육의 주요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활용 문제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 (2) 학생의 심리정서 분석과 교육안전망 구축 (학업성취와 심리 정서적 발달과 문화적 측면)
- (3) 지방대학의 경쟁력: 종합진단과 발전방안 (지역균형발전)
- (4) 북한배경 청소년 교육종단연구 (통일한국과 교육)
- (5)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분석과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교육과 경제)
- (6) 교육지표의 혁신적 개편 (교육지표를 통한 교육의 수준과 과제 분석)

중점연구의 주제는 시대를 끌고 가는 '시대정신'과도 관련이 있고, 정책적으로는 정책의제가 되기도 하며 연구기관에게는 연구계획(Research Program)이 되기도 한다.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는 연구사업 주제를 품고 가는 기관이 시대를 이끌게 된다. KEDI가 앞으로 50년 동안 이 주제들을 추구해 나간다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100주년을 기념할 것으로 기대된다. KEDI는 1970년대에 UNDP가 발주한 인구교육 Project를 통하여 출신물의 역제를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때 학령인구감소와 인구절벽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쟁교육과 사교육은 우리가 풀어야 할 혁신과제다. 앞으로의 50년을 이끌고 갈 KEDI의 핵심주제가 될 만하다.

요즘 우리나라의 우리 것이 세계적인 수준의 존재로 등장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음악, 영화, 한글, 대학, 학교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른 '한국적 존재(K-series)'가 등장한다. 세계는 한국교육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교훈을 알리는 K-education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KEDI도 언젠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KEDI가 어떤 존재로 존속하고 무엇을 그 사명으로 삼고,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가고 KEDI가 이끌고 갈 핵심주제를 무엇으로 삼으며, 무엇을 그 활동의 핵심가치로 삼는가에 따라서 'KEDI가 가야 할 50년'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50년의 역사는 가야 할 50년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 🌸

나라를 구하라

-개발원 앞으로 50년을 위한 상상력-

곽병선(제11대 한국교육개발원장, 전 한태평양교육협회 의장, 전 경인여대총장,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이 된 2022년 오늘의 엄청난 국내·외 현실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생각은 “나라가 먼저다”이다. 웬 교육정책 연구기관에 “나라가 먼저다”인가? 그것은 개발원이 연구 생산하는 교육적 상상력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정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말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 없는 교육연구는 상상할 수 없다. “나라가 먼저다”가 절체절명의 화두가 된다고 할 때, 그것에 걸맞도록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상응하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주관적인 제안을 해 본다.

—— 모든 연구에서 메타 의식의 견지

메타학습은 학습 내용으로 기존에 중요시했던 지식, 사고력, 도덕적 기량 위에 총체적 자기 성찰 역량을 새롭게 가미한 것으로,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중요하게 의식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 하나하나를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에 중요한 하나는 지금 이 연구가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데 연결되는 것인가의 입장에서 성찰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메타의식’을 모든 연구에서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인구절벽으로 국가 소멸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까지 도달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당연한 책무이다.

—— 협동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는 연구의 필요

윤리의 핵심은 이기심을 제어하고 협동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됨을 형성하는 데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 존재이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협동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조건화되었다. 따라서 한 사회가 얼마나 윤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가 얼마나 협동을 잘하느냐의 정도에 비추어 말할 수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국민 상호 간 신뢰가 높고 협동을 잘하는 나라는 윤리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윤리 강국 대열에 서느냐의 여부는 국가 존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나라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협동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협동은 윤리 도덕의 핵심이며, 협동이 잘되는 나라가 윤리 강국이고,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윤리 강국들이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나라 먼저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한국의 미래창조문명사회를 위한 으뜸 되는 윤리기준이라 할 것이다.

—— 갈등과 가해의 역사에서 치유의 역사관을 세우도록 돕는 연구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타협과 절충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분출하여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때마다, 150여 년 전 망국으로 끝맺음했던 사회분열상을 다시 보는 듯한 경우가 없지 않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주체들 간에 작은 이익과 큰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한 데에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성을 최대로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이 치유의 역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윤리규범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관용은 또한 미래 사회의 큰 흐름이 될 창의 계층의 출현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관용을 윤리 규범으로 내면화하고 체화시킨 국민들은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협동을 통하여 미래창조문명의 허브를 훨씬 굳건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 초지능 창조사회로 도약을 돕는 연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얼마나 창의정신을 갖추고, 가보지 않은 길을 열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은 바로 창의국가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첫째, 향후 20년 내 세계 20위권 내에 최소 3개 국내 대학이 올라야 한다. 신지식 생성과 기초과학의 토대는 대학이 중심역할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둘째, 통일을 내다보고 위로는 북한 신의주와 청진을 정점으로 하고, 남으로는 부산과 목포에 이르는 좌우 X축 지형을 기축으로 삼고 중흥으로 창업기술 지역들이 연계되는 창업 국가 지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세계 곳곳의 인재들이 그들의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검증해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오도록 하는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

KEDI의 교육행·재정 미래 연구방향 전망

김흥주(한국미래교육정책연구원 이사, 전 세명대학교 교수학습연구개발센터장, 전 KEDI 기획처장)

그동안 KEDI의 교육행·재정연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과연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학업 성취 수준을 향상케 하는데 얼마나 기여해 왔을까? KEDI 미래 50년은 이 물음에 보다 충실히 답하는 차원에서 그 연구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 교육행정 미래 연구 방향 전망

지금까지의 교육 미래 전망을 종합해 보면 다양성 증대로 인해 교육 체제 운영의 경직성에 대한 도전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종래의 학제 구조와 운영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려는 연구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예컨대 여전히 경직 운영되고 있는 교육계의 숙원 과제인 6-3-3-4 학제 개편과 9월 학기제의 도입, 학교 종류와 유형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학생의 학업선택 기회 확대,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증진과 상생 협력 체제 구축 연구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4차 내지 5차 산업혁명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 증대 등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공간 활용 교육 체제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연구, 학교교육과 가상공간에서의 온라인 교육과의 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연구 등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교육행정 시스템 운영 자체도 완전 디지털화하는 방안 탐색 연구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좀 더 교육행정이 기능성을 발휘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도 국가교육위원회로 인해 중앙 교육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지방교육행정 기능이 확대되며, 종래의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부와 고등교육부로 분리될 수도 있어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행정 연구도 요구된다.

— 교육재정 미래 연구 방향 전망

교육재정 분야에서의 그동안의 연구를 반성해 보면 교육발전에의 기여도 분석 혹은 교육단계별 교육투자 손익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논리는 계속 도전받게 될 것이며 좀 더 합리성에 근거한 투자 논리 개발 연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석적 접근에 의해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간의 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과학기술발달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 자동화 시스템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 재정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중립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및 행정기관들의 에너지 소비 시스템 혁신을 위한 재정 투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Covid-19와 같은 제2, 제3의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예비 교육재정의 확보도 요구될 것이다. 때문에 미래 고도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수-학습 형태 및 방법의 선제적 기반 개발을 위한 재정 투자 연구, 탄소중립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교육기관과 행정 및 소속기관의 에너지 공급 및 소비 형태 전환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및 효율적 관리연구, 각종 전염병으로부터의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재정 소요 연구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 강한 교육애와 사명감으로 무장한 KEDI

교육정책연구기관인 KEDI에서의 교육행·재정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행·재정 문제와 그 대책은 항상 정치적으로 작동한다. 정책연구의 속성상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정책 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는 향후 50년 KEDI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학생 개개인의 자유로운 참된 학업성취 수준 제고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논리가 그 어떤 정치논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KEDI가 이런 철학을 가진 기관으로 성장하려면 연구직원 모두가 한국교육에 대한 강한 애정, 그리고 정권이 아닌 국민에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한다. 한국교육을 연구하는 KEDI 연구직원들의 진실된 교육애와 교육발전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은 미래 KEDI 연구의 등불이 될 것이다. 🌱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교육 평가 혁신의 방향

박도순(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KEDI 수석연구원/교육자료부장/방송본부장, 제1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학교교육 평가는 교육과정과 교수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기 체제」로서의 기능과 교수의 「선도」 기능이 있다. 평가는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의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교수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평가의 결과가 교육과정이나 교수에 어떻게 송환되고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목표와 교육평가 내용의 불일치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지필검사의 한계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육목표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관행과 지나친 경쟁을 강요하는 평가 체제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이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과 교육평가방법의 불일치 문제로 학교교육 평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학생 특성만을 평가하는 관행과 획일화된 판단 중심의 평가 관행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 기능적 시각 중심에서 목적론적 시각 중심으로 변화 필요

교육을 보는 시각을 기능적 시각(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심에서 목적론적 시각(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것으로 귀착된다. ‘인간다운 인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보면 지적·정리적·심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전인적 인간을 말한다. 이러한 전인적 인간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인격적 통합’에 역점을 두는 교육이고, ‘인간으로서의 최대한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목적에 비추어보면,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가 비교적 명료해진다.

교육을 보는 시각에서 교육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도구적 가치)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교육 그 자체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내재적 가치) 시각은 더욱 중요하다.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게 되면, 효율성에 못지않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 자체가 가치롭고 즐거우며

행복한 교육이 핵심이 되어, 평가 자체도 경쟁보다는 협동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 상대평가 체제를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

서열중심의 상대평가 체제를 목표중심의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가장 중요한 개인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학벌은 직장을 구할 때나, 직장에서 승진할 때나, 보수를 받을 때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을 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며, 사적인 인간관계망을 형성할 때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은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를 만연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열을 부추겨 놓았으며,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대학서열화는 평가의 기제도 서열중심의 상대평가를 핵심으로 하게 만들었다. 학벌과 대학서열을 고착화시켜주는 평가 기제는 우수 학생이 “학업성적 우수자”라는 고정 관념 하에 학력에 의한 단일 서열 체제를 선호하게 하였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한경쟁을 야기시켰다. 학업성적 점수를 올리는 것이 무한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평가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기 생활, 적성 발견, 인성교육은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평가만을 강조하고 상대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평가는 그 나름대로 교육측정·평가 분야에서 기여한 바가 매우 크고 집단을 분류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기본적인 교육관과 평가 준거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며 서로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그 특성상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사이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두 종류의 평가 모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평가의 목적에 따라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선발과 평가

-고교, 대학, 대학원을 중심으로-

안건훈(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전 KEDI 도덕교육연구실 연구원)

우리나라 중등교육 입시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평준화 정책에 따른 선발제도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반세기에 걸친 평준화 정책에 따른 역기능도 따져보면서 그 시정책이나 보완책에 관해 언급하려 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은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학교 선택의 자유, 기회의 평등이 이런 강력한 평준화제도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도 조화를 이루지 않는 듯싶다.

고교평준화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우리나라 곳곳의 명문고교들을 제도적으로 퇴출시켜 버렸다. 정부의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정책의 결과로, 지역을 선도하던 학생들의 자부심이 사라지고, 서울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졌다. 이는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소위 입시 열풍이나 치맛바람은 수그러들었지만,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왔던 계기나 기회들은 그만큼 사라졌다. 기회의 평등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오직 남아 있는 관문인 대학 입학에 향한 입시열풍으로 큰 문제점을 초래했다. 인생의 여정에서 공정성이 그나마 제대로 확보된 경쟁에서, 대학입시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평준화된 전국 모든 고등학교로 확산되었다. 대학입시라는 한 번의 큰 경쟁으로 끝나는 듯한 우리나라의 이런 평가와 선발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나 현상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등학교의 경우, 하향 평준화의 후유증을 막고, 바람직한 경쟁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명문고교를 육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립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에 선발과 교육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를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수도권에 3~4개, 그 이외의 지역에 6~7곳 정도 명문고교들이 다시 나타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풍토에서 생긴 고교생들은 지력에서뿐만 아니라 언행에서 지역의 귀감이 되며, 졸업생들은 자부심을 지니면서 그 고장이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고교평준화의 장점도 병행시키면서, 지역이나 국가의 견인차 역할을 할 명문고교를 일부라도 부활 내지 육성하였으면 한다. 평준화와 의무교육 등으로 나타낸 많은 학생들이나 교사나 학교들을 각성시킬 촉진제가 필요하다. 수업시간마다 잠자는 무기력한

학생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희망을 일깨워주는 계기나 기회가 될 모범적·선도적인 고등학교들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명문고교들이 있어 명문학교의 긍지와 전통을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청소년들에게 대학입시라는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열어 놓았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있지만, 교육이나 학문 분야는 그렇지 못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고등교육 곧, 대학교육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세계에서 55위였다. 우리의 대학이 왜 이처럼 다른 분야에 비해 처져 있을까? 입학하기는 어렵지만 졸업하기는 쉬운 우리나라 느슨한 학사관리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성적평가의 경우도 흔히 50분간에 걸쳐 실시되는 한 번의 중간시험, 한 번의 기말시험, 그리고 간단한 과제물 정도로 성적을 가능하는 우리의 안이한 관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한 대학이나 몇몇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도 대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대학의 경우, 특히 국립대라면 역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을 차등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학점 수에 비례한 수업료 납부, 같은 지역 고교졸업생들의 학비감면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원의 경우, 학생 선발요건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부성적이 우수해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문계의 경우, 영어·제2외국어·전공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원 입학이 학부입학보다도 쉬운 측면이 있다. 대학원이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중요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도 수학적능력을 미리 가능할 평가가 필요하므로 권위 있는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수능능력시험이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선발과 평가와 같은 중요한 교육현안이 특정 정치집단이나 여론몰이식 분위기 조성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주민들의 투표로 교육행정가를 뽑는 선거 만능주의도 보완해야 한다.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자료나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교육가들의 의견을 차분히 검토하거나 경청하면서, 이른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에 관해 숙고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

교육개혁, 국가 발전의 동인(動因)

서정화(홍익대학교 명예교수, 전 KEDI 교육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지난 40여 년 동안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개혁과 여러 정책 추진 결과 한국교육은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고,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었고 국가발전을 촉진하고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절벽 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때다. 더욱이 젠더 갈등을 비롯한 세대 갈등과 가치관의 갈등, 지역 갈등, 진영 대결, 확정 편향적 인식 등과 같은 문제들도 완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구상하는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진 강국으로의 진입을 앞당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실천할 가치와 원칙을 새롭게 설정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교육개혁 과제 개발과 추진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혁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개혁’이란 말이 자주 사용하게 되어서인지 교육개혁이라는 용어가 식상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활동은 고정된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역사는 바로 교육개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바로 교육개혁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하는데 있어 유념할 점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개혁 추진 시 유의사항

첫째, 교육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선정되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개혁 의제는 주어진 수도 있고 개혁 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역동적인 사회일수록 개혁 과제들이 많을 것이지만 안정된 사회일수록 섬세하고 세련되고 디테일한 개혁 과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개혁 방안 마련에

참여하는 이들은 각계각층을 망라하도록 구성하되, 최고 수준의 교육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 의제 설정이나 대안 창출 및 선택 등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논의의 장을 최대한 넓히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넷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교육개혁의 추진 기초 위에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지향적이고 점증주의적 접근 방식과 단계적 추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다섯째**, 교육개혁 자문기구 구성은 탈 정치적이여야 하고, 상설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 선거와 같은 정치적 활동이나 일정에 상관없이 교육개혁 방안이 성안되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교육개혁 방안 개발과 추진을 위해서는 행·재정적·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종합적이고 망라하는 식의 개혁 과제 설정보다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며 핵심적인 개혁 안들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여덟째**,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정책결정 및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들의 관심과 국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는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교육개혁은 점차적으로 일선 학교와 대학이 주도하는 자발적, 자율적, 지속적인 교육개선 노력으로 교육 현장에 착근되도록 유도한다. 목표를 달성될 때까지 형성·집행·평가하는 정책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세계적인 싱크탱크로서 우뚝 서 있다. 우리 교육의 발전을 주도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개혁의 동인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 결과들은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나 대학교육 현장, 학교 외 교육활동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연구 활동과 성취를 통해 교육개발원이 교육개혁의 산실로 우뚝 서서 한국의 교육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사명과 책무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

KEDI의 세계 10대 교육정책연구소 재도약을 기대하며

김재춘(영남대학교 교학부총장, 교육학과 교수, 전 교육부 차관, 제17대 한국교육개발원장)

학교교육 발전의 주요 동인 중의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국가교육 연구기관들이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유아정책연구소(KICCE),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교육방송(EBS)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교육관련 전문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있어서 정부가 원하면 어떤 혁신이나 변화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데이터 기반의 결정 결정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교육 관련 다양한 전문연구기관의 존재가 한편으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 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한 교육 연구의 여러 문제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KEDI의 미래 또는 발전 방향은 여러 교육연구 개발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하다. 첫째, 국가교육연구개발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장할 별도의 '교육연구개발이사회(가칭)'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이다. 여러 기관들을 교육연구개발이사회 산하로 모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자 주어진 연구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지원·감독기관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국가교육연구개발기관들간의 연구와 실행지원 업무가 현재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 가장 많은 영역이 서로 겹치는 KEDI와 KICE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학교교육정책과 교육과정·교과서·수업·평가는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이들 영역은 함께 연구·실행지원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한 기관으로 통합하기에는 KEDI와 KICE의 인력과 예산 등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한계 또한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KEDI와 KICE가 학교교육정책과 교육과정·교과서·수업·평가를 상호 연계·협력하여 연구하고 실행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KEDI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KEDI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먼저 연구자는 KEDI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연구와 정부 정책의 실행·지원 업무를 구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KEDI의 정체성을 교육정책연구에서 찾을 수 있도록 KEDI의 조직, 예산과 인력을 연구 중심으로 혁신하고, 정부 정책의 실행·지원 업무는 KEDI 부설의 별도 기관 예컨대 '교육정책실행지원원(가칭)'을 설립하여 맡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KEDI가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세계 수준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와 정부 정책의 실행·지원업무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실행·지원업무 관련 예산과 인력이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KEDI의 정체성의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KEDI의 정체성은 점점 약해지고, 정부의 교육정책 수탁사업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KEDI는 국가 교육정책을 실행·지원하는 교육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KEDI가 과거 한때 성취했던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연구인력과 연구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연구인력 정원관리와 출연금 지원 체제 하에서 이런 방향으로 KEDI의 발전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자본의 힘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전문연구소라는 KEDI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에게도 다소 허황된 얘기로 들린다.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면 더 대범하게 꾸어보자. 전문연구인력 정원이 500여 명에 이르고 연구를 포함한 기관 운영 예산이 안정적으로 연 800억 원 정도가 확보되는 교육정책전문연구소로서 KEDI의 미래를 꿈꾸어보자. KEDI는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남고, 정부 정책의 실행·지원업무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지닌 '한국교육정책실행지원원'으로 신설하는 미래를 꿈꾸어보자. 꿈꾸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체성과 역할

진동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14대 한국교육개발원장, 전 KEDI 교육정책연구부 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이 50살이 되었다. 50살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 실적과 사업 업적, 인력과 예산 그리고 연구시설 측면에서 보면 계속 발전해서 최고의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50년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응전해야 할 문제와 과제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사회의 진행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와 새로운 과제는 고약하기까지 하다. 이것은 교육 패러다임과 체제의 변화를 요구한다. 50살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 안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

— 연구환경과 여건의 변화

한국교육개발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환경과 여건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점이다. 국가에게 국력이 중요하다면, 교육에는 교육격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교육은 품위와 격조가 달라야 한다. 교육격은 교육의 양적인 발전보다는 질적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교육의 수단적 가치보다는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교육의 내용과 과정에서 인권과 행복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교육 아젠다를 발굴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는 우리는 정보화 혁명을 넘어선 제4차산업혁명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의 관점, 패러다임과 체제가 변해야 한다. 전통적인 교육이 공급자 중심, 교사 중심,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교육은 수혜자 중심, 학생 중심, 그리고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교육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새로운 역할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50년간 교육개혁의 산실과 교육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교육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개발원의 역할은 교육 개혁의 거점 그리고

교육에 관한 아이디어뱅크(Idea Bank)로 변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 개혁의 거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지혜의 체계를 창출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교육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은 어느 한 개인, 집단 혹은 조직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그럴 수 있었지만,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현장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 원천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지식들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수백 명의 우수한 교육 전문 인력들이 모여 있고 이들이 연구·개발한 아이디어들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싱크탱크라고 부른다. 그러나 개발원은 그런 역할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일선 교육현장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이디어뱅크는 교육에 관한 고급 두뇌들이 교육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정리 조직 축적하고, 발전시키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현장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아이디어뱅크는 싱크탱크보다 역동적이고 교육 현장 중심적이고 개혁적인 조직이다.

교육개혁의 거점 그리고 아이디어뱅크의 개념은 교육개혁의 주체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지식 체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중앙정부와 관료가 아니라 일선 교육 현장과 학교구성원이라는 생각, 그리고, 개혁에 필요한 지식, 기술, 지혜는 교육학자나 교육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구성해서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새로운 역할은 개발원의 지위와 위상의 일대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중앙정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일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수혜자는 중앙정부·교육부가 아니라 교육공공체 구성원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더 큰 도약을 기원하며

반상진(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18대 한국교육개발원장)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은 청와대, 교육부 등 정부와 교육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Front Office의 역할은 물론이고, 국책연구기관의 주임인 교육쟁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교육정책 의제를 개발하는 Back Office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명실상부한 국가 교육정책개발의 중심축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가신 선배들과 가족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진천 시대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위상 강화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을 해 보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은 모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체 예산 810억원 중 25%인 200억원 정도가 정부 출연금이고 나머지가 정부수탁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연구의 자율성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의 과제는 한국교육개발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구성사는 민간에게 매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창립 50년 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100년의 역사를 갖는 기념비적인 연구기관으로 더욱 도약하기 위해 발전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출연기관인 만큼, 출연금 등 국고지원 확대는 단기 수탁사업 중심에서 연구중심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정부출연기관의 정체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한국교육개발원도 사업을 주수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인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을 통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AI, Big Data, 로봇, VR 등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수행하는 미래교육혁신센터(가칭)를 구축하여 교육양극화 지수, 고등교육지수 등 현안 교육문제 분석과 더불어 미래예측교육정책을 설계하는 메커니즘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혁적, 분산적, 포용적 리더십에 의해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혁신적 의사결정구조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상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의 자유와 자율성, 책무성, 수월성의 가치를 실현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사기 증진과 자율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교육개발원의 역사와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국가교육정책대학원대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 CERI의 이사, UNESCO 한국위원회 위원 등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고, 세계 각국이 교원정책, 학교제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육정책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할 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진은 교수직으로 전환하여 정년 65세까지 보장받음으로써 더욱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교육개발원이 현재를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정책 및 교육현장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혼합위기와 뉴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계협력, 융합의 가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은 국책교육연구기관들과의 연계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정책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재설계를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교육대전환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반세기의 깊은 역사를 지닌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관의 발전과 조직 운영의 역동성은 구성원 중심의 시스템에 의해 발휘되어야 한다. 부디 기관의 발전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문화와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서 요구되는 인간상 설정을 위한 KEDI 발전 방향 제언

김정래(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전 KEDI 교육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은 전통사회 교육패러다임을 산업사회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켰고, 교육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전문화와 함께 분화시켰다. 이 맥락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방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주요 교육 관련 기관의 산실이 되었다. 개발원은 교육의 전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분화되어 온 셈이다. 실제로 분화는 산업사회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핵심이다. 이 점에서 개발원은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비추어 이례적인 성공과 눈부신 성취를 이룬 기관이다.

인류 문명은 ‘세습-분화-융합’이라는 세 가지 패러다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개발원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이에 따른 전문적 분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으로는 급증하는 문명사적 패러다임 변혁과 교육적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이제까지 교육 정보 및 전산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만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고 패러다임의 도도한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의문이 남는다. 문명 패러다임 변혁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 양상을 살펴보면 지식사회의 키워드는 ‘융합’이다. 여기서 ‘융합’은 과거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통합’이나 ‘교과통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굳이 명명하자면, ‘메타 융합’ 능력이다.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은 메타 융합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주도적 인간’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의 거시적 방향을 연구하고 선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체성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의 상황주도적 인간이 지니는 메타 융합 능력을 나타내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T자형 인간’을 소개하기로 한다.

‘T자형 인간’은 자기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는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글자를 통해서 뜻을 보면, ‘T’의 ‘—’는 횡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문제 해결능력 등을 고루 아는 뜻(Generalist)이며 ‘|’는 종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깊이 안다는 뜻(Specialist)이다. 말하자면, 전문가와 박식가의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지식기반사회가 정보와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무한 팽창하는 지식과부하 시대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T자형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진 지식과부하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T자형 인간’이 요구된다.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분명한 점은 과거 패러다임에 묶인 교과중심 교육이나 분화된 학문중심교육으로 이러한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패러다임에 의존하여 더 이상 복종하는[듣는] 교육도 아니고, 교과내재적 가치에 천착하여 논리적 측면만을 이해하는[보는] 교육도 아니다. ‘T’자가 상징하는 ‘엮는 교육’이 따라야 한다. 여기서 엮는 교육이란 기존의 것을 추종하는 데 성공한 패스트 폴로워가 아닌 자신만의 것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고립된 존재가치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넘어서면서도 융합하는 ‘메타 융합’을 능력을 지닌 퍼스트 무버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말한다. 엮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T자형 인간’의 특성에 비추어 재조명하고 새롭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문명 패러다임에 비추어 이제 우리는 개발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 단초는 방금 제시한 ‘T자형 인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탐색해야 할 교육 형태는 ‘엮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에 맞추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위상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개발원의 연구진의 선발과 구성, 그리고 거시적인 연구인력 운영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서둘더라도 오히려 늦은 감이 적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개발원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주도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개발원 기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아울러 경주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까지 누려왔던 국제적 위상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에서의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KEDI의 연구과제

강인수(KEDI 동문회장, 수원대학교 석좌교수, 전 수원대학교 부총장, 전 KEDI 교육정책연구부)

KEDI는 설립 50주년을 맞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학교현장 혁신 연구 및 지원 등 교육전반에 걸쳐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국내에서는 100대 싱크탱크 중 정치·사회·복지·교육 분야 1위로 선정되고, 세계적으로도 10대 교육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KEDI가 국가 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인데 교육정책과 제도에 대한 헌법적 가치, 즉 헌법적합성 여부에 대한 문제, 교육의 이념과 본질을 규정한 법령의 실행에 관한 문제, 교육제도나 정부정책, 정권의 정책방향을 평가하는 연구는 드문 것 같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서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KEDI가 교육법과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 문제는 어떤 것일까. 교육에서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KEDI가 교육법과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이념(홍익인간)의 재해석과 교육목적, 목표, 방침, 바람직한 인간, 추구하는 인간 상과의 체계적 관계 연구 등

우리나라는 1946년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정부수립후 1949년 제헌국회는 교육법 제1조에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이 가끔 제기되고 있는데, 2021년에도 국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이 제안되어 논란이 있었다. 역대 정부는 교육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바람직한 인간상>, <추구하는 인간상>을 시대마다, 정부마다 다르게 제시해왔다. 지금까지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의 장에서 재해석하고 구체화하여, 교육목적-교육방침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연구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별 교육목적 규정은 두고, 교육목표 조항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에서 각급학교 교육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목표>와 <추구하는 인간상>의 체계적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교선택권 (자사고 등) 연구

고교평준화 제도가 국민의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에 따라 나타난 학교인 외국어고는 처음에는 각종 학교로 출발하여 전국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규학교로서 특목고 등의 범주로 형성되어 학생의 학교선택권 요구에 부응하면서 평준화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왔다. 그러므로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평준화 제도에 막힌 국민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요구, 학교선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교선택권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난 정부에서 주장되어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폐지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 보편적 가치를 교육받을 권리-교육내용 결정·선택권의 연구

교육과정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한마디로 헌법의 이념에 적합한 교육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 기본적 인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보통교육의 과정에서는 자라는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 규정에서 선언한 대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가르쳐야 한다. 이와 다른 일시적, 편향적 사고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과서 제도를 두고 국정, 검인정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범위 안에서 교육내용-교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과거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과목 설치나 또 특정 단체 이념 교육은 모두 편향교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에 대한 국민의 결정권('사회적 합의'), 교과서 작성권, 선택권 등, 교육내용과 교과서 제도에 대한 연구는 국가교육연구기관의 필수 업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학교교육에서 평가를 받을 학생·부모의 권리와 제도에 대한 연구

평가는 교원, 학교가 그 결과에 따라 행정을 개선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학업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 더 나은 학습으로 나갈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이기도 하다. 학생, 부모의 평가를 받을 권리는 교원과 학교의 평가를 할 권리보다 우선적이다. 교원과 학교의 평가를 할 권리는 학생·부모의 평가를 받을 권리, 학습의 결과를 알 권리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평가는 학교와 교원의 의무로서 교육의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된다. 전국기초학력진단평가의 실시 등 평가제도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학생·부모의 평가를 받을 권리와 알 권리 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 대학의 자율성 보장 연구

학문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자율은 헌법이 천명하는 국가발전의 관건이다. 그런데 근래 고등교육법 개정 추이를 보면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옥죄는 의무만을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대학종합평가가 시작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도입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혁신평가 등 각종 사업평가, 교원양성기관평가, 교수업적평가, 강의평가, 언론기관에 의한 평가 등등 각종 평가로 대학을 통제할 결과 대학의 자율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고등교육법의 대학 규제조항들에 대한 헌법적합성의 문제와 교육제도 법령주의 문제를 제기하여, 대학 자율성 보장에 대한 성찰과 연구가 절실하다.

— 사학의 자율과 지원·조성 연구

사립학교 교육은 국민의 교육의 자유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개별화, 다양화를 통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육에 대하여는 지나친 통제나 간섭보다 지원, 육성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에 맞추어 사립학교법 제1조는 입법목적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주성 확보보다 공공성 측면을 강조하여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규정하는 일이 적지 않다. 법령에 의한 규제외에도 법령을 어기면서 행정규칙이나 사업지침으로 규제하는 것도 적지 않다.

—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

KEDI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법적 성격에 따른 현실적 제약은 없는가. KEDI는 설립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집행실적, 세입·세출 결산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동법 제7조), 감독상 필요한 업무사항에 관한 보고, 업무검사 등 정부의 관리를 받았다.(제8조 검사등). 2011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출연기관법, 2011.8.4.)’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정관에 따라 KEDI는 예산요구서,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또한 KEDI는 연구회의 평가를 받고, 연구회는 평가결과를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KEDI는 과거나 지금이나 정부기관의 관리 하에 있다.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관리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관리여야 한다. 정권마다 그 성향에 맞추라는 관리는 위법이고 위헌이다. 창의성과 비판능력을 존중해야 할 연구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연구기관 설립의 취지를 존중하여 관리하여야 설립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한 요구가 다르고 연구내용에 까지 관리·감독하게 되면 기관의 설립취지를 저버리게 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가 없게 된다. 정부출연기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KEDI는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교육에서의 헌법적 문제와 교육제도 법령주의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지평을 확보하기 바란다. 🌱





KEDI에 바란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란다

오석환(교육부 기획조정실장)

KEDI의 미래 역할과 발전 방향:

지식공유와 학습문화, 네트워크
과학의 관점에서

박선형(동국대학교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언

박성일(송정동초등학교 교감,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자문단)

KEDI에 바란다. 학부모를 가르쳐 달라.

조보영(서전고등학교 학부모)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란다

오석환(교육부 기획조정실장)



한국교육개발원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국책연구기관으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72년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 교육의 토대를 만들고 교육개혁을 선도해 왔으며 오늘날 미래 교육을 이끄는 세계적인 교육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등 우리 교육 분야 곳곳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루어 낸 업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교육개발원 성장의 기록은 우리 교육의 역사이며, 빈곤 속에서도 인재를 키워 국가를 부흥시킨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오늘날 10대 경제 대국으로 달 탐사선을 발사하는 과학기술력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노래와 영화를 만드는 문화를 갖춘 나라로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부와 풍요는 우리 이전 세대의 노력 덕분이며 그 중심에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당면해 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과제이다. 과거 선진 주요국을 빠르게 배워 따라갔던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 전환에 있어 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다. 새로운 미래 사회를 이끄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미래 교육 체제로 우리 교육을 전환하는 것은 우리 교육계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교육 개혁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던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교육 현안을 해결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반세기를 여는 미래 교육의 물꼬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첫째, 미래 교육을 위한 '도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 교육은 모범 정답이 없는 과제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새로운 미래 교육 수립에 있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도전'이다.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의 참화라는 역경 속에서 학교를 만들고 교사를 양성하며 학교교육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 교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며,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자들이 기존의 사고 방식을 과감히 허파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교육 체제가 과거와 달리 수많은 사회·경제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매우 복잡해졌기에 '도전'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교육 문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새로운 직관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육부도 한국교육개발원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그 가치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

—— 둘째, '현장' 중심의 실증적 교육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바란다.

탈근대 철학의 많은 사상은 '중앙'의 권위에 귀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진 '변방'이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교육의 영역에서 바라본다면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창조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원격수업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새로운 수업을 고민해왔던 교사들을 꼽는다. 학교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교육정책과 연구에 있어 중앙에서 내려가는 '탑다운(Top Down)' 방식에서 현장에서 시작되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미래 교육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는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복원하여 미래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개별화된 다양성은 살리기 어려운 가치이다.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교육은 현장의 자율성 속에서 다양하게 실현될 때 가능한 일이다. 최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비롯한 교원들의 실천적 연구들이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교육 현장과 함께 많은 연구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 현장과 강화된 연계 속에서 현장 연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계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셋째, 교육 분야 '융합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바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따라 분화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기관들은 오늘날 각각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미래 교육에 있어 한 분야에 정통한 '자형' 인재도 중요하지만 자기 분야와 함께 다른 분야까지 폭넓게 꿰뚫고 있는 'T자형' 인재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양한 교육 관계기관들의 본산으로 교육 연구의 깊이를 담당하는 수직축(I)과 함께 기관들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수평축(T)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센터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 관계기관이 결합하여 교육정책의 실행과 연구를 결합하는 소통과 협력 체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복지 등 교육 이외의 분야와의 협업과 국제적 연구 기관들과의 교류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의 대표 연구 기관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야와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공유와 협력을 선도적으로 끌어내 주기를 당부드린다.

넷째,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은 우리 일상 전반을 디지털로 바꾸고 있다. 근 10여 년 사이에 팸플릿을 보고 전화로 음식을 주문했던 일은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방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호 메뉴, 시간대별 주문량, 음식평 등의 디지털로 변환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식자재 준비, 메뉴의 구성, 배달원 배정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하는 요식업 분야 전체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달하며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에서도 이미 민간 학습플랫폼에서 학생의 학습 행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수업 방법론,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기기의 영향 등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연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선구적으로 구축한 교육 데이터 센터의 연구들은 여기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에 관한 계속된 연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도 계속해주시기를 바란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구성원 간의 격차 문제가 심화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 사회 역시 빈부 격차, 지역 격차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 격차 해결도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국가 공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가정과 지역의 경제·문화적 기반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더욱 두텁게,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에게는 더욱 세밀한 맞춤형 교육 복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가 유지되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 복지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방안 마련에 함께 고심해주시기를 바란다.

시대적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는 구성원에게 고통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의 교육 역량을 결집하여 해결해 낸다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앞으로 더욱 강화된 협력 체계를 만들어 연구자와 행정가의 밀접한 소통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교육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KEDI의 미래 역할과 발전 방향: 지식공유와 학습문화, 네트워크 과학의 관점에서

박선형(동국대학교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장)



— 1. 한국교육개발원의 성과와 기여¹⁾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972년 창립 이래 반세기 세월 동안 중추적인 국책기관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KEDI는 교육현장 개선과 선진화된 정책대안 제시 및 혁신적 미래교육 체제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가시적 성과를 성공적으로 생성·확산한 바 있다. 또한 선도 연구기관으로서 유·초등·중등·고등교육 분야 등 교육 전반을 망라하는 전문연구 인력풀을 구축하여 교육 실제 적용 연구와 발전적 이론 생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문공동체의 관련 연구 활성화와 고등교육 체제의 신진학자 확보를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KEDI가 쌓아 올린 눈부신 양적·질적 성장과 한층 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대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동질적인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동시에 창립 50주년 기념 「교육개발」특별호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크나큰 자긍심도 가진다.

1) 기존 출간 논문(박선형, 2004, 2010, 2017)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인생 100세의 관점에서 보면 50세는 젊다고 보기에는 다소 나이가 들었으며, 늙었다고 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해당한다. 공자의 선견지명을 따르면, 50세는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갖춘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생 경구 중에서 “젊음은 알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나이는 하지 못한 것을 탄식한다(If youth only knew, if age only could)”라는 격언이 있다. 젊은 시절에 발생하는 무지의 한계와 노화에 따른 수행 역량의 저하를 지칭하는 문구이다. 50년의 연차는 연륜 부족이 초래하는 무지의 함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생체 기능의 저하로 평소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는 생물학적 한계치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KEDI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은 미래 비전의 차별화와 기관 역량의 성숙성에 기초하여 ‘무지의 한계에 대한 탄식’과 ‘성취하지 못함에 대한 미련’이 일절 남지 않는, 또 다른 50년 웅비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발전적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응원과 성원을 보내는 입장에서 KEDI의 미래적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지식공유와 학습문화 및 네트워크 과학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학습되지 않은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식이 공유·선행되지 않는 한 공공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과정(과 문제해결 과정)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성과 불확실성 및 예측 불가능성으로 점철된 현대사회에 있어 교육 쟁점의 효과적 해소와 정책실행안의 응용 실천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협력적 참여 행위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기반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2. 지식공유와 학습문화의 관점에서의 KEDI 역할과 발전 방향

지능정보사회 출현과 인터넷 사용의 적극적 활성화는 개인과 집단 및 조직 내에서의 지식공유와 융합적 확산을 더욱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정치·문화·경제 등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이 웹에 의해서 밀접하게 연동된 현재의 초연결사회에 있어서 지식공유는 다양한 공동체의 협업적 창조성과 지식의 대중화를 유발하여 인류문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지성 구축에 일조한다. 미래 정보학자인 Leadbeater에 따르면 향후 시대정신은 지식에 대한 기존의 독점적 소유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는 공유한다, 고로 창조한다”라는 집단 공유의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 그는 공유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규범 조건과 운영 규칙에 관한 제반 선행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 바 있다(이순희 역, 2009: 128). 첫째,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집단으로 구성된 핵심조직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유 프로젝트는 개인의 흥미와 호기심 및 도전정신을 유발하는 흥미 있는 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오류검증·개선과정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동료의 신속한 평가·환류과정이 있어야 한다. 넷째, 소집단 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습단위별로 과업이 분배되어야 하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 선별을 위한 명료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해당 프로젝트의 소유권은 참여 구성원 모두를 위해 공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한 이들 조건은 KEDI의 향후 연구 활동과 기관 운영의 미래적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참조 기제가 될 수 있다. 우선 기관 내에 지식융합과 학습융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단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소집단 학습조직을 가상공간과 실제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구성하고, 전문 영역별로 온라인 토론이 가능한 지식융합 활동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문융합의 추세를 반영하는 최근 연구보고서, 연구사례 모음집, 연구제안서 등의 문서저장소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지식공유를 촉진하고, 다양한 학문공동체 각 구성원의 지적 호기심을 공통으로 반영하는 융합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글쓰기를 촉진하는 소규모 학술모임을 온·오프라인상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러한 시도는 지식융합의 기술공학적 측면과 참여 구성원 행위의 실행적 측면의 균형점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동료검증과 환류과정(Peer review & Feedback)을 통과한 지식융합에 관한 공동연구 결과물을 KEDI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문공동체 간의 지식공유를 강화하려는 협력적 노력을 기울인다. 더불어서 영역별 전문 역량을 소지한 학자와 실무가를 안내하는 전문성 인명사전과 관련기관의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상 지식지도(The virtual knowledge map)를 작성하고, 지식융합 자료 탐색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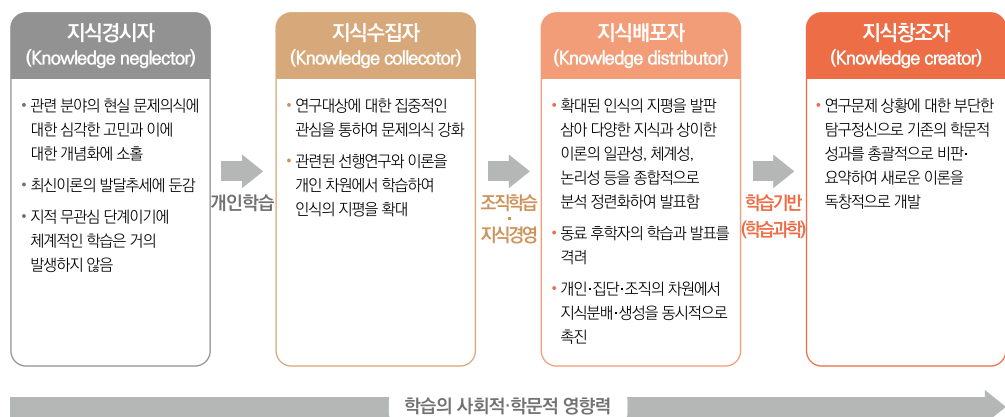
검색엔진과 구성원의 참여활동(다운로드 수, 온라인 토론 참여도, 웹 접속 빈도, 공동연구회 참여 상황, 융합보고서 작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공동체 운영도구 등을 마련한다.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웹상에서 운영하는 ‘열린 지식존’이나 현대경제연구원의 ‘열린 지식카페’는 전술된 내용 모두를 포괄하는, 가상공간상의 가장 성공적인 지식공유를 위한 열린 지식 생태계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학문융합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을 공동 발표하는 정기 포럼 개최와 전문 영역별 지식인지도(The domain-specific expertise map) 출간을 병행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지식공유의 전사적 확대를 위한 KEDI의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과 인적 역량개발 및 융합적 학습문화 구축에 일조할 것이다.

학습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공유를 위한 노력은 학습공유를 달성하려는 개인 연구자의 탐구 자세와 지적 호기심의 내면화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지식과 학습은 필수불가결의 상호 연계적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즉, 학습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학습과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기반사회는 학습기반사회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Hargreaves, 2003: 3)은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 사실상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지식은 항상 존재하였고, 인간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라는 용어는 20세기 이후의 시대적 특성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부정확한 외연적 범위와 협소한 내용적 의미를 가진다. 후기근대사회의 제반 특성(미래예측의 불확실성, 불완전한 합리성, 환경구조적 변수의 복잡성, 지식의 불확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확정된 ‘지식기반사회’라는 용어보다는 중단 없는, 지속적 배움을 가정하는 ‘학습기반사회’라는 명칭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

KEDI가 시대를 선도하는 국책기관으로서 많은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개별 연구자들은 진리 탐구에 대한 식지 않는 학문적 열정과 다양한 연구문제에 대한 성찰적 학습 자세 및 자신의 인지적 한계를 자각하는 초인지(Meta-cognition)와 같은 학습기반적 연구풍토가 내부적으로 확립·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문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지식창조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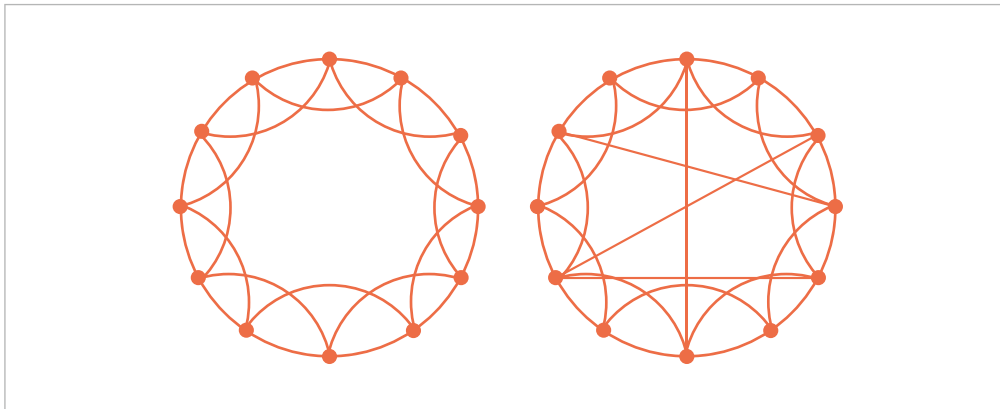
• [그림 2] 학습기반 사회에서 지식공유에 대한 개별 연구자의 태도(좌에서 우로 갈수록 바람직함) •

※ 출처: 박선형(2010: 96)

3.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의 KEDI 역할과 발전 방향

인간은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 전체를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약 80억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대한 숫자에 기초하여 보면 우리 세상은 매우 복잡한 연결 경로(link)를 가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좁은 세상(Small World)'에 살고 있다. 사실상 지구촌 전 세계의 인구는 여섯 단계의 연결 경로에 의해서 서로 간에 연결된다. 일상생활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당사자인 두 사람만 면식 경험이 없다 뿐이지 쌍방이 공통으로 아는 사람에 의해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광범위하게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실제 거리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각의 공동체가 어떻게 공통 연결 경로를 활용하여 정보전달과 지식공유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현대의 네트워크 과학은 이를 위한 흥미 있는 발견을 제시하고 있다. 무작위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 세계라 하더라도 연결 경로를 몇 개만 추가하면 노드와 노드 간의 평균 거리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질적인 조직체들, 격리된 다양한 여러 공동체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몇 개의 연결 경로만을 추가하면 지식공유나 의사소통의 신속함은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그림 2] 와 같다(Barabási, 2002; 강병훈·김기훈 역: 90).



• [그림 2] 밀집화된 세계와 네트워크기반 좁은 세계 •

양 그림은 좁은 세상이 어떻게 연결 경로를 추가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왼쪽은 밀집화된 세상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원주에 정착적인 노드를 설정하고, 이것을 노드 옆의 인접한 노드들과 직접 연결한 그림이다. 오른쪽은 왼쪽 그림에다가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노드 쌍들을 연결하는 소수의 연결 경로인 링크를 추가한 그림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새로이 추가된 연계점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노드 간의 간격과 거리를 효율적으로 단축 연결하는 일종의 지름길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 간의 평균 분리 정도는 급격하게 단축된다.

상기한 네트워크 과학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학습공동체가 어디에 존재하든 간에 상호연결망적인 통로를 통하여 신속한 지식공유는 물론 효과적인 지식확산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결망 통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심점인 허브(Hub)의 개념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웹상에서 허브는 무수히 많은 연결망을 독점하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즉, 허브는 “전체 네트워크를 지배하며 네트워크를 좁은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Barabasi, 2002; 강병훈·김기훈 역: 109). KEDI가 국내·외 교육정책 쟁점 분석과 실천적 해결책 탐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축적·확산하기 위해서는 핵심 교육정책 전문기관으로서 기타 전문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식정보 및 다방면의 숙련된 집단지성을 총체적으로 서로 연결시켜 주는 중심점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과학에 의하면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 KEDI 창립 5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는 지식공유·학습문화·네트워크 과학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모든 교육 이해당사자(교육관련 집단, 교육정책담당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연구기관, 사회 각계각층 이해당사자 등) 상호 간의 다른 의견을 경청·조정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합의된 방향성과 조율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모든 것”에 해당할 수 있다. KEDI가 다가오는 반세기 발전적 역사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강력한 지식기반과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최고의 실천 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국제연구기관으로 우뚝 서리라는 개인적 확신을 가져본다. 🌱

참고문헌

- 박선형(2004).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이론적 모델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2(1), 157-177.
- 박선형(2010). 지식융합: 지식경영적 접근과 이해. *교육학연구*, 48(1), 83-101.
- 박선형(2017). 한국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에 대한 저술사적 논의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
- Barabási, A. (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강병훈·김기훈 역[2002].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서울: 동아사이.
- Hargreaves, A. (2003). *Teaching in the knowledge socie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Leadbeater, C. (2008). *We-think*. 이순희 역[2009].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21세기북스.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언

박성일(송정동초등학교 교감,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자문단)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그간 노력에 현장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기관이 되길 기원한다.

지난 50년 동안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연구 개발사업과 주요 교육정책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을 제안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연구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였다. 학교교육연구, 교원 정책, 고교학점제 등 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과 디지털 교육, 민주시민·통일교육 등 미래 교육정책 연구를 선도하고, 영재교육, 교육복지, 교육시설 및 환경, 학교 평가 등 학교교육 현장의 질 개선 등 우리 교육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50년 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었으나,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 등 새로운 기관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그 성과물들이 우리 교육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없었다면 이런 기관들의 출범이나 교육의 성과들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다른 기관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기준과 좌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정성은 우리 교육의 모범 사례로 보인다.

21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변화와 혁신이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세계의 선진국들은 국가 발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사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핵심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교육사업이다. 이런 중심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교육의 이념, 체제, 방법, 교육환경 등에 관한 연구 역량을 확대하여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연구개발의 중핵정책 기관으로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기후 환경위기에 직면하였고, 우리의 일과 삶의 방식도 변화할 것이다.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래 세대를 살아갈 모든 학습자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 체제를 바꾸기 위한 연구와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에 기반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교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은 지속해서 제시해주고 이런 정책과 대안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의 국내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정말 중요하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개발원의 위상은 연구기관 스스로 정립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지향점은 언제나 한 곳을 향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교육 기조가 변하더라도 연구기관의 연구의 큰 방향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며, 이것은 연구의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과정이 바로 연구기관의 책임과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연구기관의 과제 선정에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기본과제는 대표 연구로서 그 결과는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본과제를 선정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기본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역량을 갖춘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장과 괴리된 채 선정된 기본과제와 연구는 현장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과제 선정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기본과제를 선정하고 현장의 뛰어난 교원들이 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진다면 그 연구 결과는 더욱 신뢰받을 것이다.

셋째,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생명은 당연한 교육 과제에 대한 연구역량을 높여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연구기관과의 차별성은 바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다. 국내에 많은 연구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고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항상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고 정확한 문제 인식과 확고한 이론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서 현재의 위치를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해서 우수한 연구진을 충원하고 아울러 현재의 연구진들의 연구역량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여건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미래 교육에 대비한 정책들을 연구하여 새로운 교육의 변혁기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살고 있다. ‘현재의 우리 교육 속에서 자란 학생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잘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 50년간의 사회변화보다 어찌 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사회의 변화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선의 학교는 사이버 원격교육,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교육캠퍼스, 종이 없는 학교의 교실 등 코로나19 팬데믹과 기술 개발이 맞물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디지털 학교 문명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춰 현실감 있는 이론 개발, 관련 제도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관련된 기관들과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연구를 수행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정부 기관, 대학의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의 연구소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 협업과 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 및 연구 결과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의 중심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점이 되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한국교육개발원의 개원 50주년을 축하드리며 다가올 50년에 무궁한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큰 기여가 있기를 현장 교원으로서 기원한다. ❀

KEDI에 바란다. 학부모를 가르쳐 달라.

조보영(서전고등학교 학부모)



“ 학부모를 가르쳐 달라. ”

“ 학부모가 배움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 달라. ”

내가 엄마들의 숙제인 ‘아이들 대학교까지 보내기’를 하면서 바라왔던 부분이고, 실현될 때 우리나라 교육에 도움이 되리라고 항상 생각해 왔던 부분이다.

나는 KEDI가 운영에 참여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두 자녀를 보낸 엄마다. KEDI와 학교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한 그들의 이상향과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그동안 학부모로서 지켜봐 왔다. 내가 생각하는 KEDI의 교육 방향은 대부분 이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당연히 내 정체성도 외부인이나 학생보다는 학부모에 가깝다. 학부모로서 내가 KEDI에게 바라는 점은 학부모가 공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에 참여한다”란 자녀 교육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니다. 물론 부모와 학교의 협력도 중요하고 꼭 말해야 하는 주제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KEDI가 교육 대상을 넓게 봤으면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가르쳐 달라. 학생들만 가르치지 말라. 내가 해 놓고 봐도 다소 뻔뻔한 요구 같다. 청년교육이 주목적일 KEDI에 어른들 공부를 바란다니 말이다. 물론 현재 학부모 공부라는 것이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을 위해서이며, 또한 어른들을 부모로 둔 아이들을 위해서이다.

우리 집 첫째는 고등학교 때 전학을 한 번 했다. 전학 전에는 대학 진학률을 최우선으로 보는 학교에, 전학 후에는 학생 자율을 추구하는 학교에 다녔다. 첫째 딸이 전학한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던 날이 기억난다. 당시 고1이었던 딸은 새로운 학교에서 첫 하루를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여기 특수목적학교 같은 곳이야?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수업은 안 하고 춤만 춰.” 알고 보니 체육대회 준비 기간이었다. 전교생이 대회 장기자랑 시간 때 출 반별 갈군무를 연습하느라 분주했던 것이다. 그전까지 딸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수시든 정시든 자신이 원하는 입시 전형에 따른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학생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대회도 조용히 넘어가던 학교였다. 야간자율학습을 14시간 할지 15시간 할지 고민하며 살다가 체육대회를 한다는 소리 들은 딸은 정신없어 하면서도 재밌다고 했다. 학교는 그걸 ‘학생 자율’이라고 했다. KEDI와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꿈꾸는 혁신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대학을 위한 도구가 아닌 즐거운 곳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할 거라고 했다.

사실 처음엔 그저 노는 분위기라고 생각했다. 시골이라 이런 분위기일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전학 이전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그래도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하는 모양이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내 눈에도 보일 정도로 확연했기에, 곧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공부만 할 때는 스케줄러를 쓴 적이 없던 두 아이가 자율형 공립고에 다니면서부터 일정표를 쓰게 됐다. 수행평가나 각종 대회를 비롯하여 친구들끼리 하는 행사까지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몰아치는 일들을 처리하려면 자기 일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성적에 맞춰 대학 가겠다고 딸은 이제 자기 진로는 스스로 정하겠다고 말한다. 이야기해 보면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는 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주체성을 길러 가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었다. ‘KEDI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구나.’,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응원해 주는구나.’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내 인식은 이렇게 자리잡혔다.

이처럼 KEDI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어른들이, 특히 학부모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는 성인들에게 돈과 같은 것이어서, 입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입시가 잘 되면 많은 고민이 해결되곤 한다. 고3 엄마를 두 번 하다 보니 자식들 입시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급 학생들 입시 이야기까지 다 주워들게 됐다. 국립대와 인서울 대학을 둘 다 합격했는데 어느 쪽으로 진학할지를 두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이야기나 자녀가 인서울 대학에 갈 성적이 되고 진학을 원하는데 부모는 연고 없는 도시에 가지 말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라고 다그쳤다면 이야기도 있다. 아예 관심 없는 부모나 너무 관심 많은 부모 이야기도 듣게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듣다 보면 부모지만 부모 자격 없는 부모가 많은 세상이구나, 느껴지는 사례도 간혹 있었다.

예전엔 앞집도 옆집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어진 대로 살았다. 아는 게 없으니 자신의 처지에 대해 특별히 억울하지 않았다. 다 같이 못 살아도 그저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지금 애들은 그렇지 않다. 충분한 교육을 받아 대체로 높은 지적 수준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데 부모의 반대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심정을 느끼고 있을지 안타까웠다. 물론 상황이 어려워도 개인의 노력과 재능으로 극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애들이 성장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다면, 나도 부모로서 같이 성장하고 싶었다. 다른 집 부모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한 번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아이들과 같은 것을 배워, 같은 풍경을 보고 싶다고.

이미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교육은 단순히 아이를 어떤 대학에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아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교양과 인문학을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이야기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그런 소양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보는 넓은 세상을 직접 보지는 못해도 상상해보고 싶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에 관심이 아예 없는 소수의 부모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어른들도 접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아이들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는 일의 격차가 아이들이 크는 속도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여자끼리? 가끔 사귀는 애들 있지. ”

딸이 대학교 1학년, 아들이 고1이던 해에 아이들 입에서 태연하게 나온 말이다.

그 말을 시작으로 내게는 익숙하지 않은 연애 목격담들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동성끼리도 가끔 사귀다더라는 이야기나, 자기가 무성애자라고 밝혔다는 친구의 이야기도 있었다. 내게는 낯설지만, 아이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 같았다. 성소수자, 그리고 이성애가 아닌 사랑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어디서 들었냐고 했더니 요즘엔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했다.

성소수자들은 예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주변에서 성소수자들을 본 적이 없었다. 본인의 성적 지향을 내게 숨겼거나,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적당히 선을 봐서 결혼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전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당당히 밝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다르다. 본인의 성적 지향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변화가 생겼다는 걸 느낀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포용력이 넓어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개방적인 사고를 하게 된 데에는 학교교육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학교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니 아이들도 이상한 사랑은 없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 싶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 배움을 선 적은 없다고 나름대로 자신한다. 어려서부터 수학이라면 자신 있었고, 아이들의 공부를 같이하며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도 사이버대학과 직장을 병행하며 사회복지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지식적인 부분이다. 나는 과연 교양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을까?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을까? 요즘 쟁점이 되는 주제는 뭘까? 요즘에는 동성애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말을 들은 이후, 나는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니 나 스스로는 이성애자인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성적 지향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과연 제대로 된 말이었을까? 세상의 변화에 문외한은 아니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도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른다. 예시로 든 사례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주제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나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종종 헷갈린다. 생각도 못 한 발언들에 놀라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 나도 같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다. 학교 운영이 아닌 학교 학습 내용, 교양 커리큘럼 자체에 흥미가 생겼다. 아이들은 재미없다며 흘려듣거나 듣는 내내 졸고 있다던 학교 특강이나 일 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던 의무 교육들을 학부모로서 함께 듣고 싶었다. 넓게 보자면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의 가치관일테니 말이다. 우리 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혹은 우리 때와는 바뀐 사회상 말이다. 그것을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싶었다. 학부모도 배울 수 있게 해 준다면, 공부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해 준다면 어떨까.

KEDI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관경영목표는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교육 체제 혁신 선도’라고 되어 있다. 물론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겠지만, 대상을 학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곧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해서 기관 목적에 불합치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 아닐까. 학부모에게 적절한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학부모 교육을 바란다.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란 말에 많은 중년들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공부가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들로부터 배우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교육이야말로 우리네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실히 나와 있을 텐데 말이다. 두 아이의 학부모로 있는 동안 나는 아이들을 따라 공부했으며,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그런 경험에 만족했다. 때로는 신기함과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는 모두 좋은 경험이었다.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학부모들이 공부를 주도하고 아이들이 이에 따라가는 구도만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배우는 공부에 학부모가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봤던 세상과 다소 달라진 어린 세대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말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다. KEDI에 바란다. 학부모를 가르쳐 달라. 🌱



한눈에 보는 KEDI 50년 연구

한눈에 보는 KEDI 50년 연구·사업

조옥경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고등교육연구실 연구위원)



한눈에 보는 KEDI 50년 연구·사업¹⁾

조옥경(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고등교육연구실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많은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 반세기(창립~2021년 7월 기준) 동안 수행한 연구의 보고서는 기본연구 보고서 1,337편과 수탁연구 보고서 1,611편으로 기본연구와 수탁연구만 합쳐도 총 2,948편이 된다. 기본연구와 수탁연구 외에 기술보고서와 수탁사업 내에서 수행한 연구 보고서, 수탁사업 결과보고서 및 관련 보고서, 각종 연구와 관련한 연구자료까지 합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연구 외에도 연구를 통해 수립된 정책, 제도 등이 교육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왔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수행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와 사업을 모두 나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난 50년간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수많은 연구와 사업을 일람할 수 있도록 시대별 연구 제목에서 나타난 연구의 경향과 의미 있었던 연구 주제 50선 및 17개 주요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본고는 KEDI 50주년 기념사업 연구사업성과분과책임자 조옥경·김유원·문보은·백승주·서재영·유경훈·이승호·정혜주·정규열에서 제작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사업 50년의 성과(2022)'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1. 연구 제목으로 본 KEDI 50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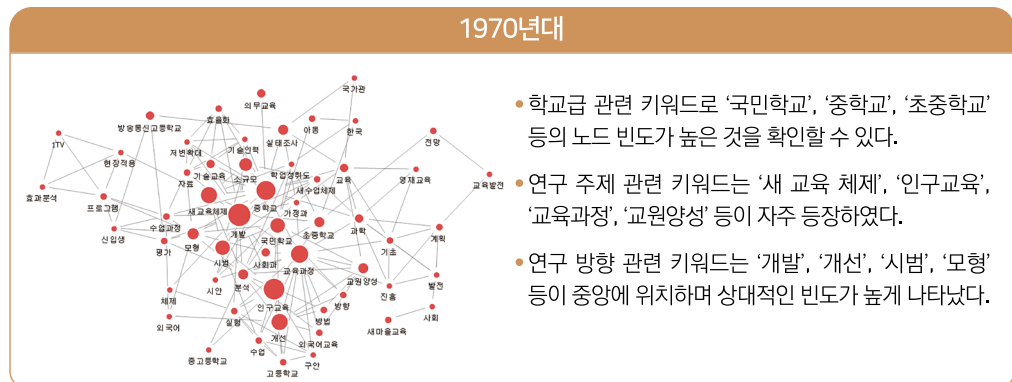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난 50년 동안 시대별로 수행한 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본연구와 수탁연구의 제목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표 1>과 같이 1970년대부터 2010년대 이후까지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시대별 연구 제목 키워드 간 연결중심성으로 그려본 네트워크 지도는 [그림 1]~[그림 5]와 같다.

• <표 1> 시기별 분석 대상 연구 보고서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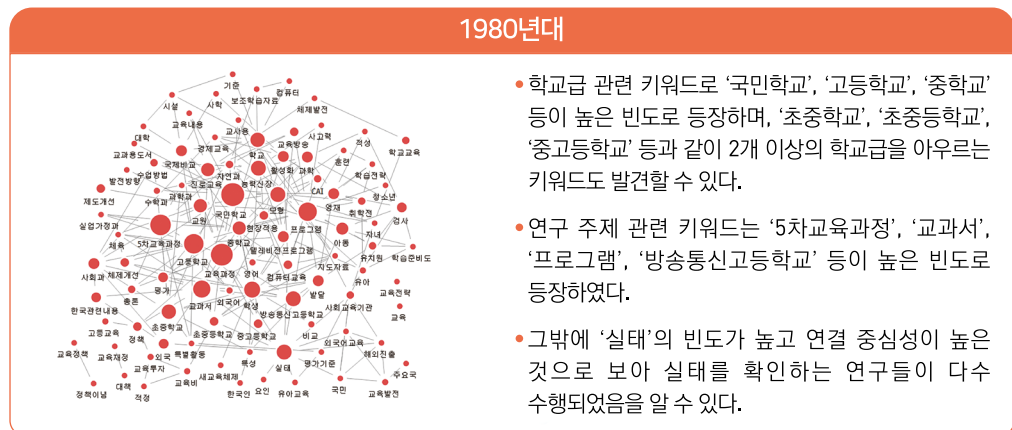
(단위: 편(%))

구분	1970년대 [1973~1979]	1980년대 [1980~1989]	1990년대 [1990~1999]	2000년대 [2000~2009]	2010년대 이후 [2010~2021]	계
기본연구(IRR)	110	302	264	240	382	1,298
수탁연구(CR)	11	84	343	633	536	1,607
전체	121	386	607	873	918	2,905

※ KEDI 50주년 기념사업 연구사업성과분과에서 1차 목록화 작업을 완료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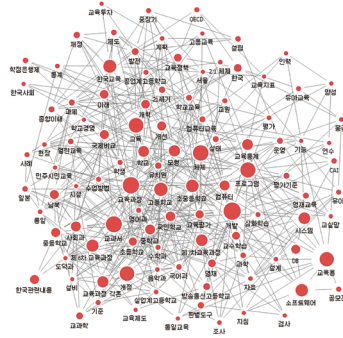


• [그림 1] 1970년대 키워드의 네트워크 지도 (빈도 2 이상) •



• [그림 2] 1980년대 키워드의 네트워크 지도 (빈도 3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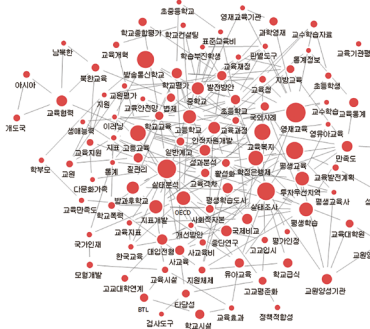
1990년대



- 학교급 관련 키워드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이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 연구 주제 관련 키워드는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제7차교육과정’, ‘교과서’ 등이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 교육 관련 키워드인 ‘컴퓨터’,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을 중심으로 ‘제도’, ‘발전’, ‘중장기’, ‘계획’, ‘개학’ 등이 연결되어 있다.
- 연구 방향 관련 키워드는 ‘개발’, ‘체제’ 등이 중앙에 위치하며 상대적인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3] 1990년대 키워드의 네트워크 지도 (빈도 5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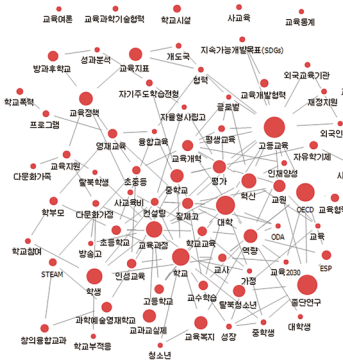
2000년대



- 학교급 관련 키워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 노드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연구 주제와 관련 키워드는 ‘고등교육’, ‘영재교육’, ‘교육복지’, ‘학습은행제’, ‘방송통신학교’ 등이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
- 연구 방향 관련 키워드로는 ‘지표개발’, ‘실태분석’, ‘실태조사’, ‘만족도’ 등이 자주 등장하였다.

• [그림 4] 2000년대 키워드의 네트워크 지도 (빈도 5 이상) •

2010년대 이후



- 학교급 관련 키워드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연구 주제와 관련 키워드는 ‘고등교육’, ‘대학’, ‘OECD’, ‘역량’, ‘교육과정’ 등이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 그밖에 ‘중단연구’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그림 5] 2010년대 키워드의 네트워크 지도 (빈도 5 이상) •

— 2. KEDI 50년, 연구 주제 50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한국교육을 움직인 ‘KEDI 연구 주제 50선’을 선정하였다. 2,948편²⁾의 연구 중 시대별 수행된 연구 수 비율에 따라 연구 주제의 수를 할당하였고, 연구 주제의 선정을 위해 ‘교육정책의 수립, 정착, 확산에의 기여’, ‘연구 결과의 법제화’, ‘사회 또는 학계에서의 이슈화’, ‘후속 연구(사업)의 시초’, ‘대규모 예산 소요 및 장기 추진’, ‘당대의 사회적·교육적 특성이나 요구 반영’ 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의견조사, 자문진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연구 주제 50선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 <표2> KEDI 50년 시대별 연구 주제 50선 •

연대	주제 수	연구주제
1970	4개	새 교육 체제(E·M project: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교육발전
1980	11개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서 정책, 사고력 신장, 교원 수급, 표준교육비, 지방교육재정, 사교육 경감, 대학입학시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방송, 컴퓨터보조학습
1990	10개	교육 비전 수립, 교육열, 교육 자치제, 유아교육 체제, 통일 대비 교육, 민주시민 교육, 영재 교육, 직업 교육, 국가 교육 통계, 교육 연구 DB(데이터베이스)
2000	11개	국제 연구·협력(OECD, ODA),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학교 폭력, 교육복지, 평생학습, 검사도구, 대입전형, 학제, 다문화 교육, 교육중단연구, 학교교육 수준·실태
2010년대 이후	14개	고등교육재정, 대학공유 체제, 대학평가·진단, 고교다양화, 자유학기제, 소규모학교, 미래교육, 온종일 돌봄, 인성교육, 탈북청소년교육, 교육여론조사, 교원정책, 대학교수·학습, 교육환경·시설

먼저, 1970년대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4개로 ‘새 교육 체제(E·M project: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교육발전’ 등이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해결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새 교육 체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고, 의무교육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학교 의무교육’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사회문제화되는 입시 및 교육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관련 연구와 사회변화 대응 및 미래사회 선도를 위해 ‘교육발전’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다음으로, 1980년대는 연구 팽창·발전기로 비약적인 연구의 양적 확대와 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 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데 이바지하는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방대한 연구 실적을 쌓고 독보적인 교육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연구주제로 선정된 것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서 정책’, ‘사고력 신장’, ‘교원 수급’, ‘표준교육비’, ‘지방교육재정’, ‘사교육 경감’, ‘대학입학시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방송’, ‘컴퓨터보조학습’ 등 11개이다.

1990년대의 주요 수행 연구주제는 10개로, ‘교육 비전 수립’, ‘교육열’, ‘교육 자치제’, ‘유아교육 체제’, ‘통일 대비 교육’, ‘민주시민 교육’, ‘영재 교육’, ‘직업 교육’, ‘국가 교육 통계’, ‘교육 연구 DB(데이터베이스)’ 등이다. 이 시기의 연구 주제는 크게 새로운 교육 비전 및 체제 연구, 사회 문제 및 요구 대응 연구, 제도적·정치적 변화 부응 연구, 기관 조직 및 역할 증대 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2) 연구 보고서 2차 목록화 작업을 완료한 2021년 7월 기준으로 기본연구 보고서 1,337개와 수탁연구 보고서 1,611개의 총 2,948개 보고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1990년대 후반, 한국교육개발원의 멀티미디어연구센터(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한국교육방송원(1997년 출범) 이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7년 설립)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년 출범) 분리·독립 등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기능의 분화 및 재편이 이루어지면서(한국교육개발원, 2002³⁾ 2000년대부터 연구 주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대의 주요 연구주제는 ‘국제 연구·협력(OECD, ODA)’,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학교 폭력’, ‘교육복지’, ‘평생학습’, ‘검사도구’, ‘대입전형’, ‘학제’, ‘다문화 교육’, ‘교육종단연구’, ‘학교교육 수준·실태’ 등과 같이 11개가 선정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주제는 크게 연구·교육 체제의 확장 및 발전, 교육문제 해결, 취약집단 교육복지, 데이터(증거) 기반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대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재정’, ‘대학공유 체제’, ‘대학평가·진단’, ‘고교다양화’, ‘자유학기제’, ‘소규모학교’, ‘미래교육’, ‘온종일 돌봄’, ‘인성교육’, ‘탈북청소년교육’, ‘교육여론조사’, ‘교원정책’, ‘대학교수·학습’, ‘교육환경·시설’ 등이 있다. 총 14개 연구 주제가 선정되었는데 연구 주제의 다양화와 함께 특히 고등교육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KEDI 주요 사업과 성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지난 50년간 연구 외에도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며 연구를 통해 수립된 정책, 제도 등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업은 사업 추진 당시의 교육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라진 사업도 있고, 출연연구기관의 기능 분화와 재편에 따라 더 이상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지 않게 된 사업들도 있다. 2021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사업 중 17개 주요 사업과 그 추진 성과를 소개하면 <표 3>과 같다.

• <표3> KEDI의 주요 사업과 추진 성과 •

번호	사업명	추진 배경(과정)	성과
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사업	1980년대 후반 교원양성 인원의 급증에 따라 1990년대 초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평가인증 체제 제안. 1998년 1주기 시작	국가 수준의 체계적 교원양성 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각 기관들의 자체 교육의 질 개선 노력 자극, 부실 운영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및 전공 축소·폐지를 통한 교원양성 교육의 내실화 기여
2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	2000년대 초부터 정책연구를 주도하며 사업 추진. 한국의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에 따라 역할 필요성 증대	다양한 개발도상국 교육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와 ODA 전문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3	교육복지 정책 사업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소득 격차 심화, 계층 간 지역 분리 등의 상황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도입	학생의 성장, 학교 구성원 만족,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정책의 분화 및 파급 등의 성과
4	교육시설 정책지원 연구·사업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와 KEDI 간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최초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개소	초·중등 학교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전문 지원을 시작으로 각 정부부처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시설·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는 데 기여

3) 한국교육개발원 30년사

번호	사업명	추진 배경(과정)	성과
5	교육정책 네트워크 사업	자율화 및 교육자치 기초의 확산으로 교육정책 관련 기관 간 정책적 조율 요구 증대에 따라 2002년부터 구축·운영	교육정책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교육정책의 성공적 교육현장 착근에 많은 기여
6	교육통계사업	1998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사업 이관 후 2017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	기초 통계 자료 생산, 통계 분석 자료 산출·제공, 온·오프라인 사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통계정보의 질적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제 구축, 국제기구와의 각종 통계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교육의 국제신인도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7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운영사업으로 시작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진단·평가 분야 연구 전문성 강화, 국가 단위의 평가 운영 체제의 본보기 상 정립,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대학 맞춤형 정보제공 등의 성과
8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시책 사업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정책 수립 및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 수행, 성과분석과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각종 연구사업을 통해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지역별 격차 해소 및 질 관리에 기여
9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사업	교육소외계층의 중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력 취득 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 문교부가 연구를 위탁하면서 출발	다양한 연구 수행 및 법·제도 개선, 교육소외계층 중등 학력 취득 기회 확대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체제 개선,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공유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고도화 등의 교수학습 체제 개선 등의 성과
10	시·도교육청 평가 사업	5·31 교육개혁 과제의 효과적 현장 실현 및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 촉진을 위해 1996년 평가 도입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국가 교육정책 과제의 효과적 집행과 확산,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통로 마련,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
11	영재교육 연구·사업	1980년대부터 연구·사업 수행, 1987년에는 국내 최초 영재교육연구실 설치,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2002)에 영재교육연구원으로 명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영재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며, 영재교육 정책 방안 및 미래 비전 수립에 기여
12	위(Wee) 프로젝트 운영지원 사업	2008년 시작된 국가정책사업으로 2010년 9월 위(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개소	학생 상담 체계의 현장 안착과 동시에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며 사업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도출
13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사업	2012~2013년 연구를 통해 인성교육 관련 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 2013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

번호	사업명	추진 배경(과정)	성과
14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 교육 공약으로 제시됨에 따라 교육부와 함께 시범운영계획 수립(2013) 등 추진. 2020년 사업 종료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혁신과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미래 핵심역량 교육 촉진, 중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참여 확대 등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
15	지방교육재정 분석 사업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운영·성과 관련 종합적 정보관리와 연계 분석의 필요에 따라 2010년 지방교육재정분석 및 진단 규정(훈령) 제정을 통해 전문관리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 지방교육재정 제도 발전 및 개선, 지방교육재정 담당자의 역량강화, 효과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 기반 확충,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인 분석 및 환류 수행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
16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사업	탈북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09년 교육부의 위탁으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설립	탈북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고, 교사역량을 강화하며,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활동을 활성화
17	OECD 교육연구 사업	1996년 OECD 정회원국 가입, OECD 교육정책 위원회(EDPC)와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운영위원회에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OECD 교육 연구·사업의 참여 주제 및 중재 역할 필요성 대두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의 한국대표이자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참여 기관 간 협력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20여 년간의 OECD 교육 연구·사업 참여를 통해 우리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국가별 교육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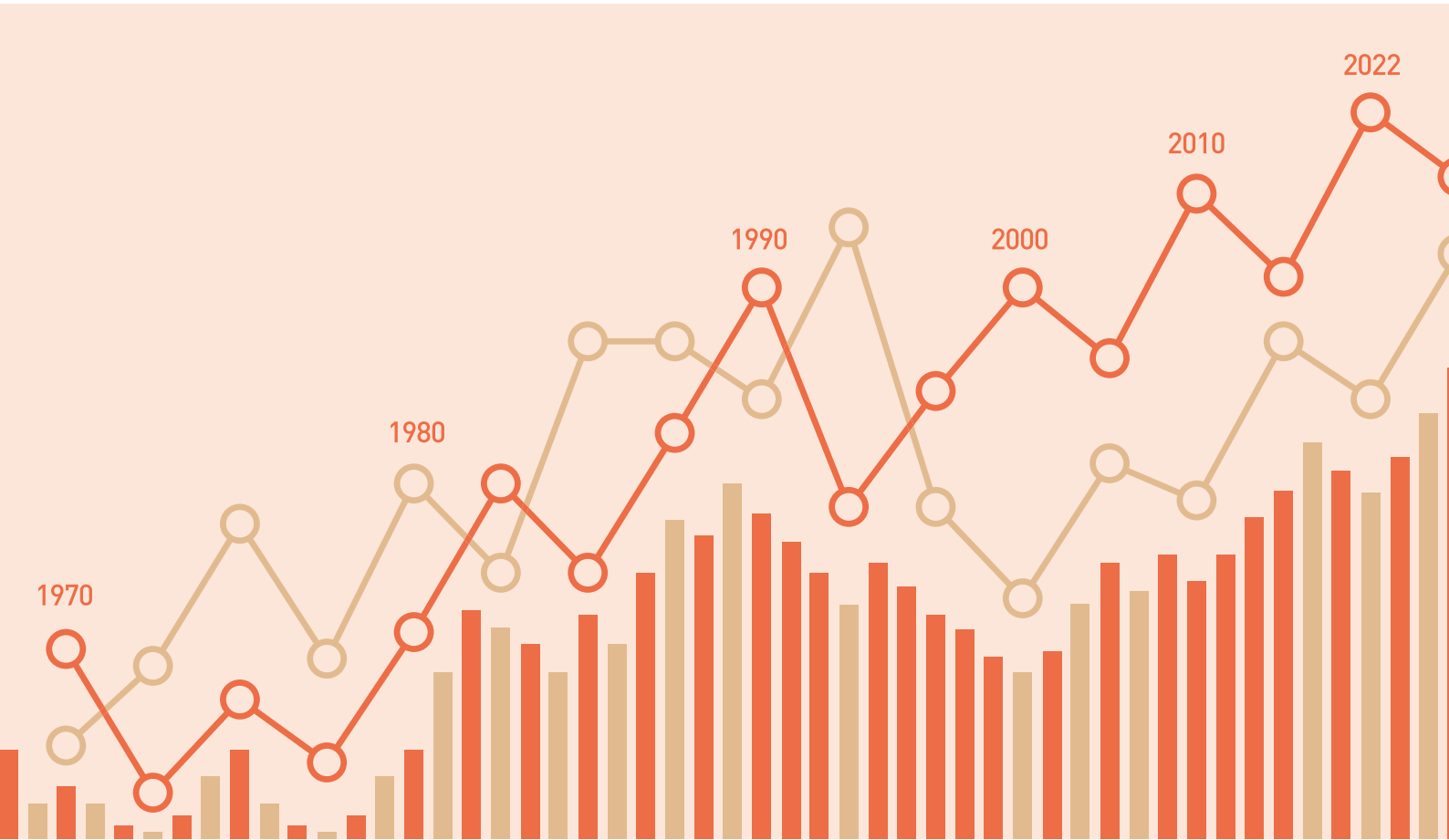
이상으로 지난 50년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와 사업을 개괄해 보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방대한 연구 실적을 쌓으며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즉,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주제 및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선도, 사회와 학계에서의 이슈 대응, 사회적·교육적 특성 및 요구 부응, 다양한 후속 연구 및 사업의 시초의 역할 등을 통해 교육정책을 비롯하여 학문 및 교육 사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다양한 국가 수준의 주요 교육정책 관련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주요 사업들은 그 중요성과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시의성과 선도성이 높은 사업의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의 공간적 범위 측면에서도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협력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업은 정책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통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한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 50년

교육통계 및 주요 지표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육 50년의 변화

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연구위원)



교육통계 및 주요 지표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육 50년의 변화

정동철(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된 1972년은 교육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시기의 한가운데였다. 1960~1970년대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교육열이 높아지는 시기였다. 2022년 국민의 교육열은 당시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출범한 1972년부터 현재인 2022년까지 50년 동안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습 여건의 변화를 교육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1. 학생수

학생수는 교육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등의 영향에 따라 변해왔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1965년 이후의 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생수의 증가는 1970년대에도 지속하다가 1986년 11,048,128명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약간의 부침은 있었으나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¹⁾

1) 통계청에 따르면 당시 인구는 41,213,674명으로, 전체 인구의 26.8%가 초·중·고·대학생이었다. 2022년 추계인구는 51,628,1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가 초·중·고·대학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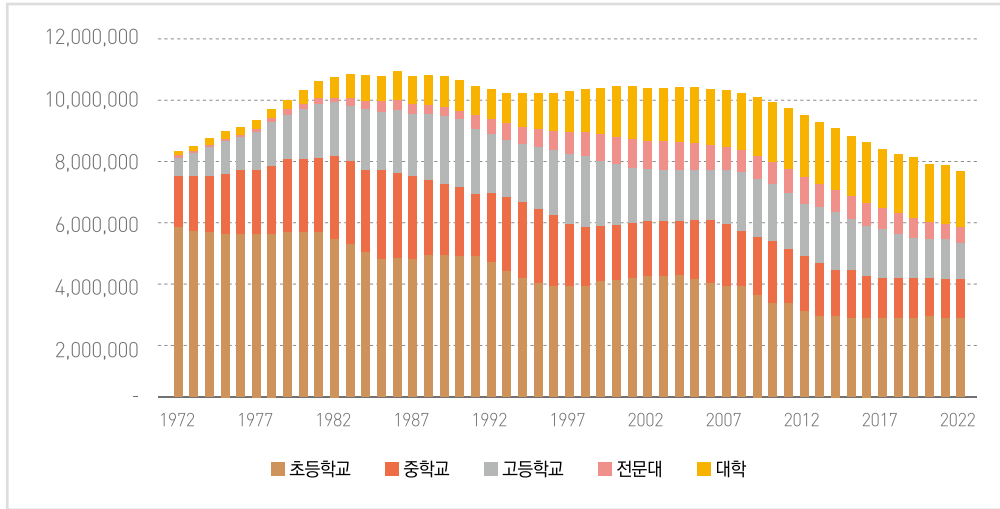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당시 인구는 41,213,674명으로, 전체 인구의 26.8%가 초·중·고·대학생이었다. 2022년 추계인구는 51,628,1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가 초·중·고·대학생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많은데, 실제 학생수 감소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다. 초등학생 규모는 1970년대 초부터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한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 덕분에 전체 학생수 규모의 감소 시기는 좀 늦춰졌다. 2022년 현재 학생수는 7,703,059명으로 1986년의 학생수의 69.7%로 감소하였다. 초등학생 수의 정점은 5,807,448명을 기록한 1971년이었고, 중학교는 1985년 2,782,173명, 고등학교는 1998년 2,326,880명, 전문대는 2002년 963,129명, 대학은 2014년 2,130,046명으로 각각 최고 학생수를 기록하였다.

교육열이 높아진 1960년대 이후 과열된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경쟁과 학교 간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하여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 '고교선발추첨배정입시제도'를 채택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진학률이 높아졌다. 1969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0년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등에서 '중학교무시험입학제'가 시행되었다. 높아진 중학교 진학률로 고등학교 진학 수요가 팽창하였고, 이에 따른 고등학교 입시경쟁의 과열로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선발추첨배정입시제도'를 채택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초등학생 수는 1971년 정점에 이른 이후에 1976년~1980년, 1987년~1989년, 1997년~2003년 세 기간에 걸쳐 잠시 반등하였고, 중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는 순차적으로 각각 5~8년 후에 반등하였으나,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 추세는 2022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본격적인 경제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공계 인력 양성, 전문대학제도 도입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하여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대학 정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정원을 억제하였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부응한 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대학생 수가 대폭 증가했다. 첫 번째는 1981년 본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성적을 반영하면서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여 대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였을 때이다. 두 번째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중 자율화 정책의 하나인 입학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준추직유를 도입함에 따라 대학교육의 양적인 확대로 대학생 수가 급증하였을 때이다. 확대된 대학생 수는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도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2024년부터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대비 입학생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 신입생 충원율은 84.8%에 그쳤다.





• [그림 1] 학생수의 변화(1972~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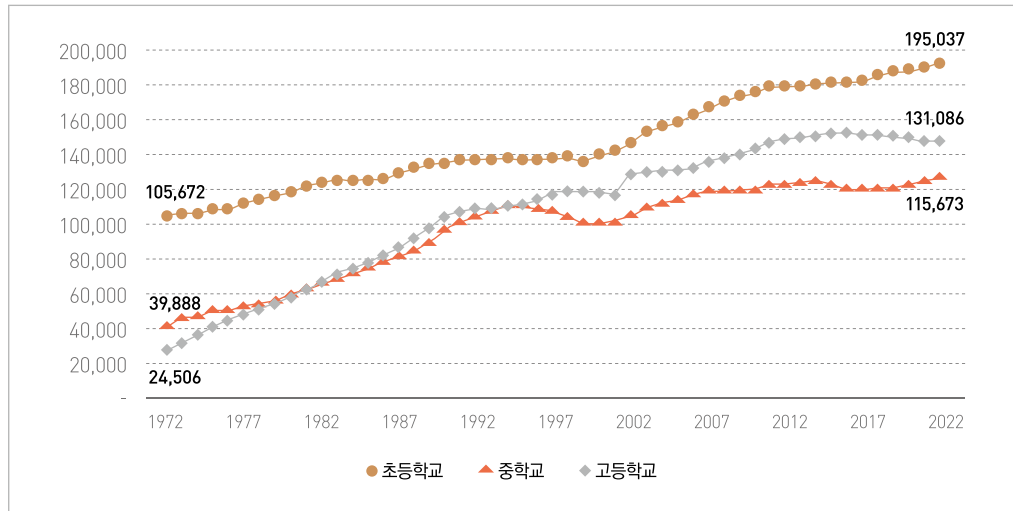
전문대에서 1972년부터 1978년까지는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초급대 학생수의 합이고, 전문학교 학생은 1985년까지, 초급대 학생은 1984년까지 포함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 교원수

앞서 살펴본 초·중·고교 학생수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교원수는 1999년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어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1972년 초등학교 교원수는 105,67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95,037명으로 1.8배 증가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수는 각각 39,888명에서 115,673명으로 2.9배, 24,506명에서 131,086명으로 5.4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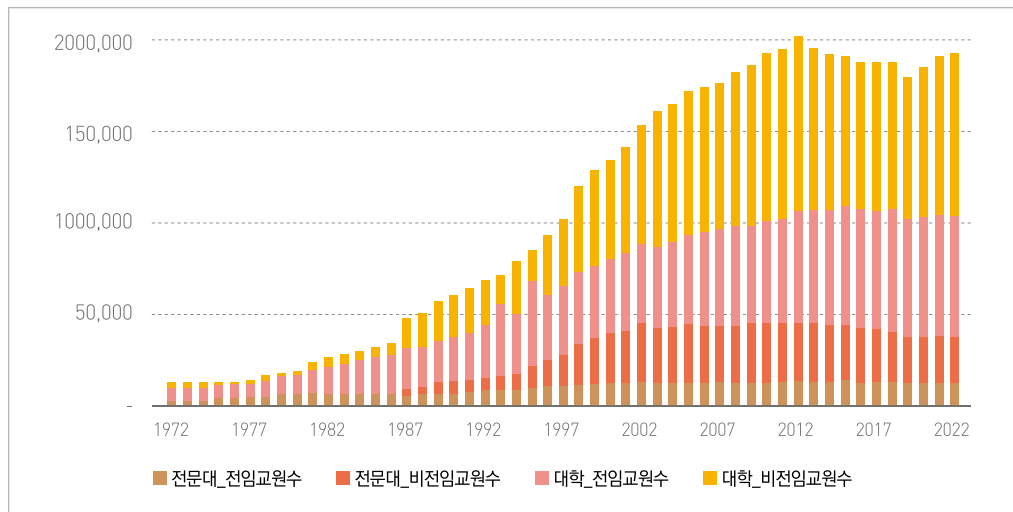
초등교사 양성기관이 종전의 고등학교 수준인 사범학교가 1962년 초급대학(2년제)으로 승격 개편하면서 10개의 교육대학이 발족하였고, 1975년에는 16개교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 초등교원 과잉 현상이 나타나 1979년까지 교육대학 통폐합을 통해 11개교로 축소하였고, 임시초등교원양성소 운영을 중지하였으며, 1981년에는 교육대학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였다. 1990년에는 국공립 사범대학,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임용하는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아 공개 전형으로 신규 교사를 채용하게 되었다. 이후 초등교원 양성 체제를 유지하다가 1999년에 교원정년 단축으로 초등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수 교육 후 초등교과 전담교사 임용하거나 학사편입생 제도 신설을 통해 초등교원을 공급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학교 무시험중학교 무시험진학과 고교평준화로 중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져 중등교원 수요가 증가하지만, 경제구조 확대로 인하여 교원의 이직률은 증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립대학교에도 사범대학을 설치하고,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설치도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후 중등교원 양성자 증가로 미발령자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등 공급 과잉 현상 일어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 정원의 제한, 교원자격 검정기준 성적 기준 상향, 국립사범계 대학의 정원 축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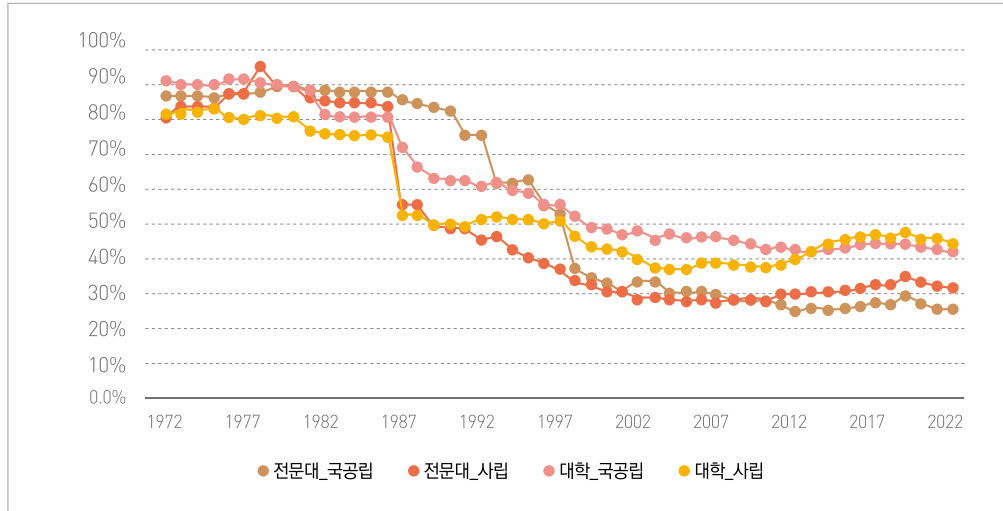


• [그림 2] 초·중·고교 교원수(1972~2022) •

1972년 10,692명이었던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은 1970년대 후반부터 매년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2012년에 202,047명까지 증가하여 정점에 다다랐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교원수가 증가하는데, 전문대는 주로 비전임교수의 확대에 기인하였고, 대학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모두 확대되었지만, 비전임교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최근 전임교원의 비중이 전문대는 30% 정도, 대학은 40%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교원 전체의 양적인 증가에 비하여 전임교원의 비중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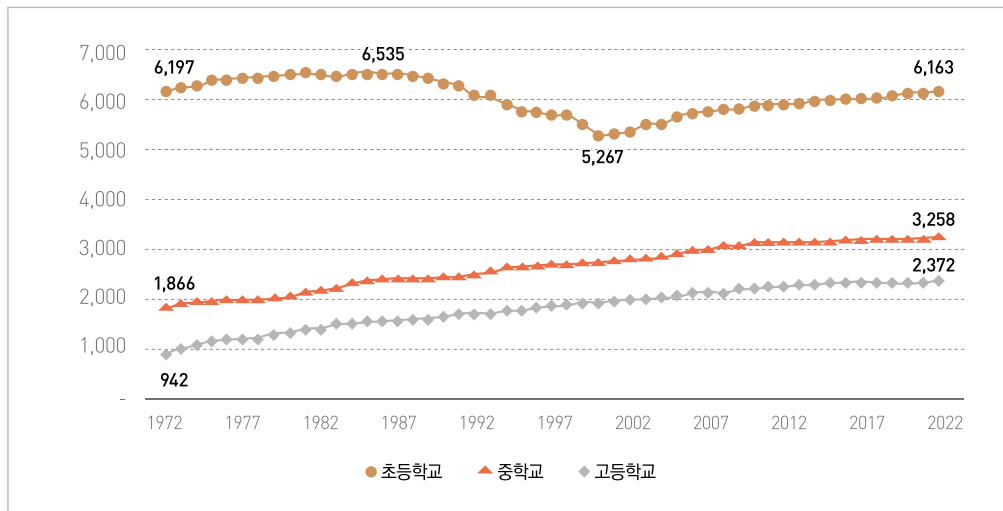
• [그림 3] 전문대학·대학 교원수(1972~2022) •



• [그림 4] 전문대·대학 전임교원 비율(1972~2022) •

3. 학교수

초등학교는 1986년 6,535개교가 될 때까지 증가하다가 1982년부터 추진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2000년 5,267개교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2022년 6,163개교까지 다시 증가하였는데,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지방 신도시에 학교를 신설 또는 증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초등학교 수가 증감을 반복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꾸준히 증가하여 각각 1972년 1,866개교와 942개교에서 2022년 3,258개교와 2,372개교가 증가하였다. 중학교는 1.7배, 고등학교는 2.5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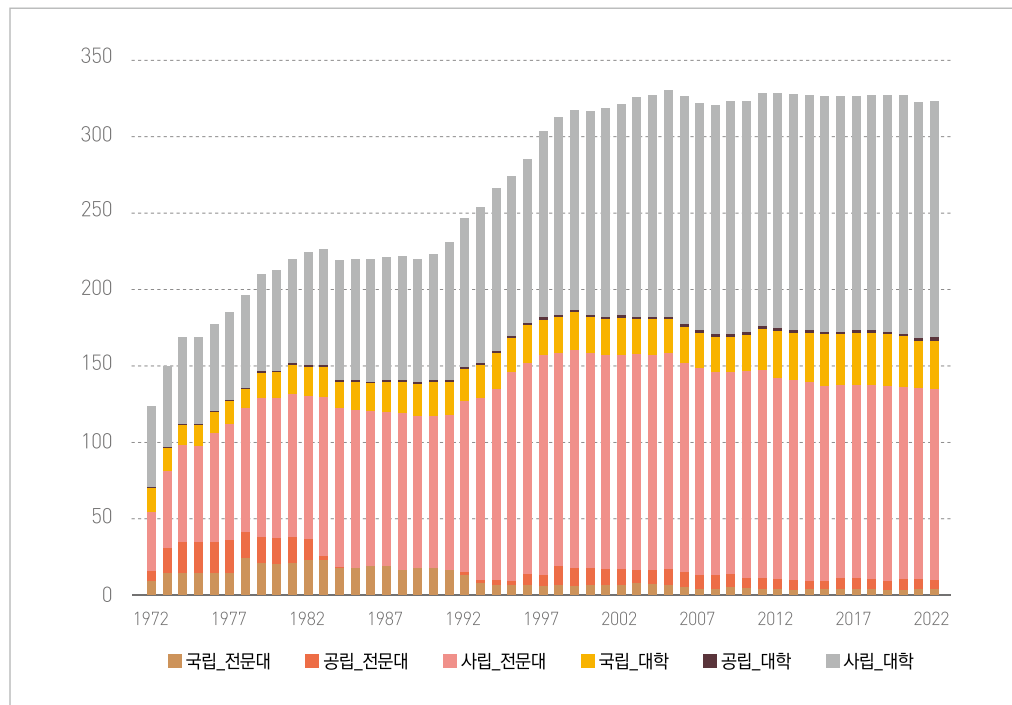


• [그림 5] 초·중·고교 학교수(1972~2022) •

1972년에는 전문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56개교의 실업고등전문학교(44개교)와 초급대(12개교)가 있었다. 1979년에 대학으로 승격된 대학을 제외한 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가 모두 전문대학으로 일원화되었다.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중등교육기관이었던 실업고등전문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학교가 본격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문학교의 대학승격으로 종래의 4년제 대학 중심의 일원적 대학교육 체제에 실업계 단기대학교육의 축이 추가되어 이원적 대학교육구조로 전환되었다. 전문대학이 출범한 1979년에는 모두 127개교가 있었는데, 1980년대 초반까지 전문대학이 첫 번째로 확대되는 시기였고, 1990년대는 다시 한번 양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였다. 1999년 161개교를 정점으로 하여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여 2022년 134개교까지 감소하였다.

대학은 1979년과 1997년 급격하게 학교수가 증가한 해가 있지만 1972년 69개교에서 시작하여 2012년 189개교까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 초까지 대학 수가 증가한 것은 대학입학정원 확대 정책으로 기존 대학의 확장과 더불어 신규대학의 설립이 권장되었기 때문이고, 1990년대 대학 수의 급격한 증가는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에 따라 대학설립이 과거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2018~2020년 사이에 191개교로 가장 많은 대학 수가 있었지만 이후 1개교가 감소하여 2022년 190개교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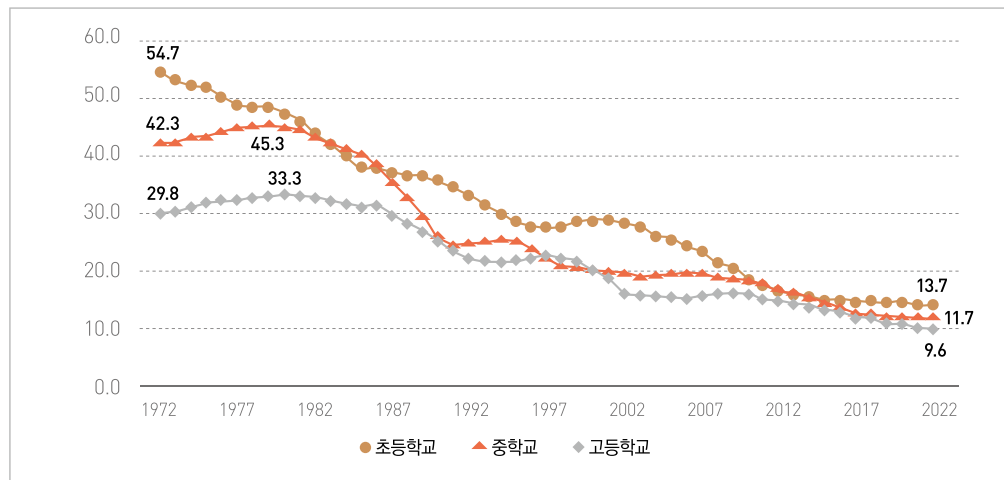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사립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 사립이 1970년대에는 70% 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3년부터 8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10년 후인 1993년부터는 90%대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1970~1980년대는 78~79% 정도를 유지하다가 1992년부터는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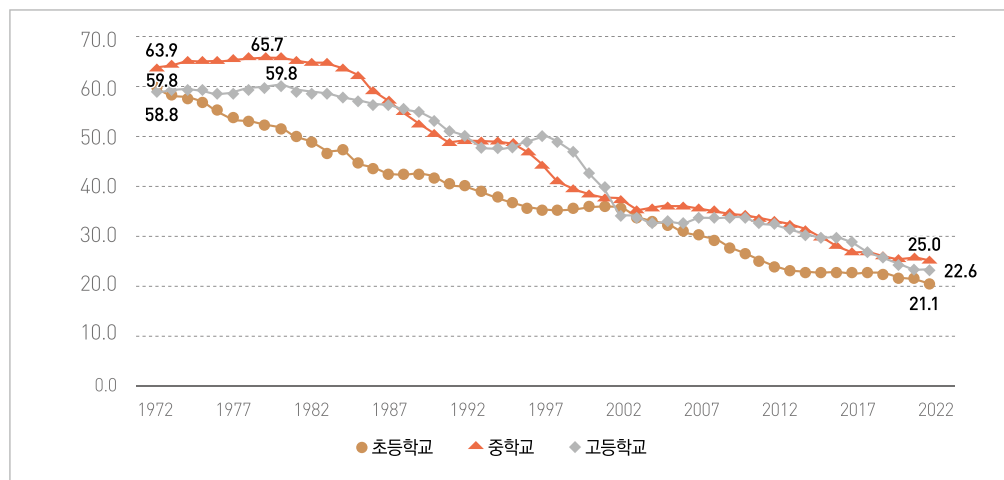
• [그림 6] 전문대·대학수(1972~2022) •

4. 학습 여건

교육 기회와 교육 수요의 확대에 따라 학습 여건에 대한 개선도 추진되었다. 1972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54.7명이었고, 학급당 학생수는 59.8명이었다. 교원의 증가와 학생수의 감소가 맞물려 2022년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7명, 학급당 학생수는 21.1명으로 감소하여 50년 동안 각각 25%, 35%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도 증가하였지만 높아진 진학을 때문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70년대 말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45.3명, 33.3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교원 정년 단축으로 감소 추세가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9.6명까지 감소하였다. 학급당 학생수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 말까지 중학교 65.7명, 고등학교 59.8명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2년에는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까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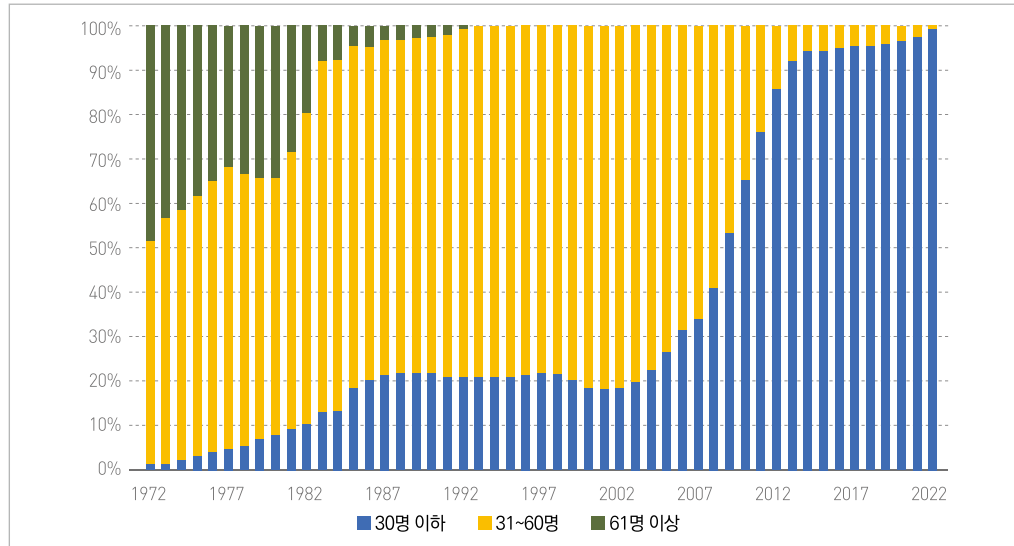


• [그림 7] 초·중·고교 교원 1인당 학생수(1972~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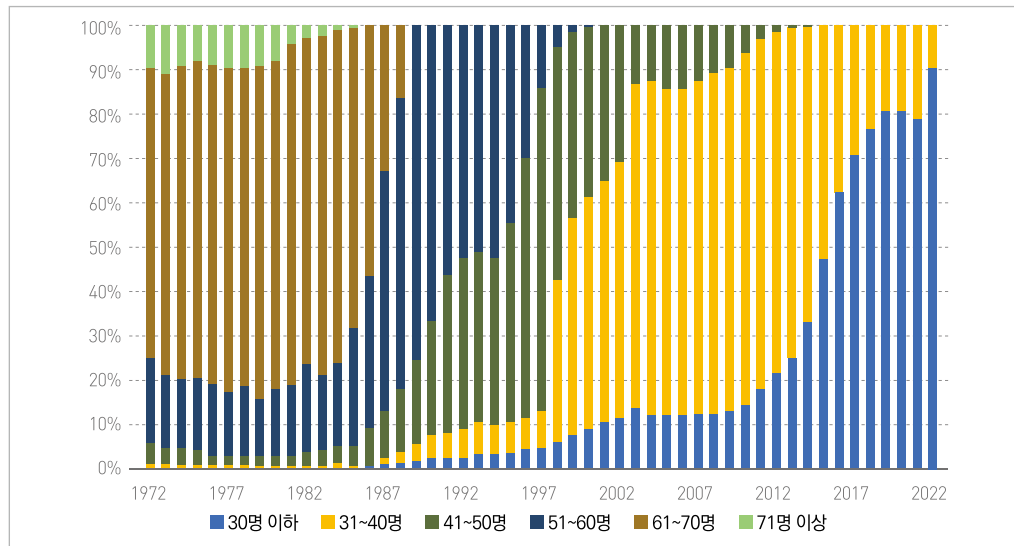


• [그림 8]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1972~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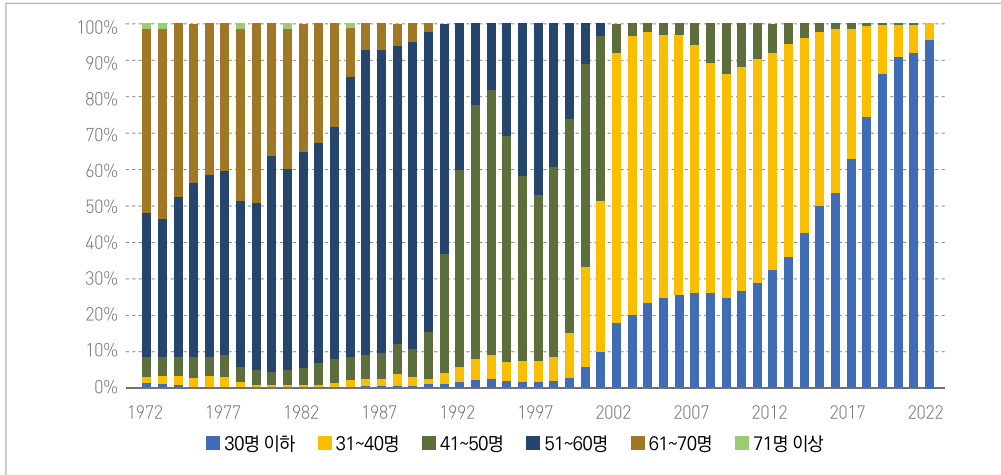
학생수별 학급수 구성비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61명 이상인 학급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라졌고, 2010년대 이후에는 95% 이상이 30명 이하로 구성되었고 2022년에는 99.3%가 30명 이하의 학급이다. 중학교는 1972년에 70% 이상을 차지하던 61명 이상의 학급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라졌고, 2010년대 후반에는 41명 이상인 학급도 사라졌다. 2022년 30명 이하인 학급이 전체의 90.6%를 차지한다. 고등학교는 1972년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61명 이상의 학급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거의 사라졌다. 2022년에는 30명 이하의 학급이 전체의 95.5%를 차지한다.



• [그림 9] 학생수별 초등학교 학급수 구성비(1972~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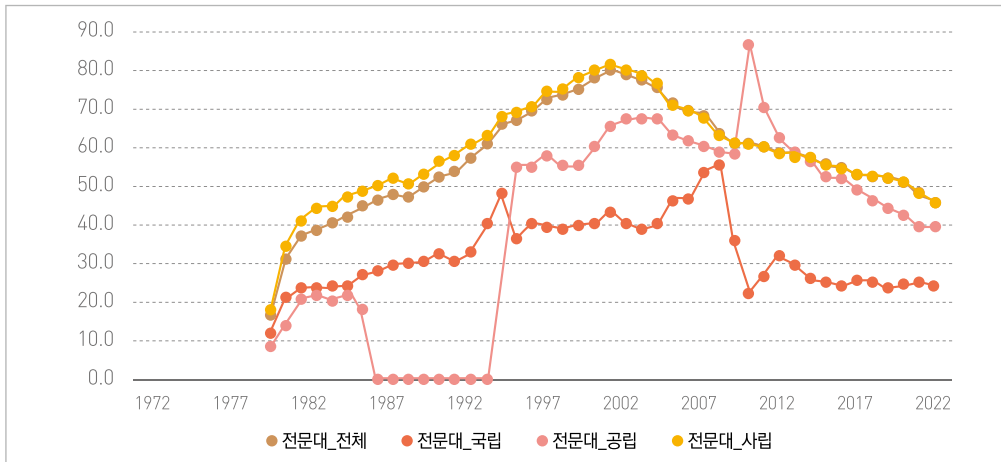


• [그림 10] 학생수별 중학교 학급수 구성비(1972~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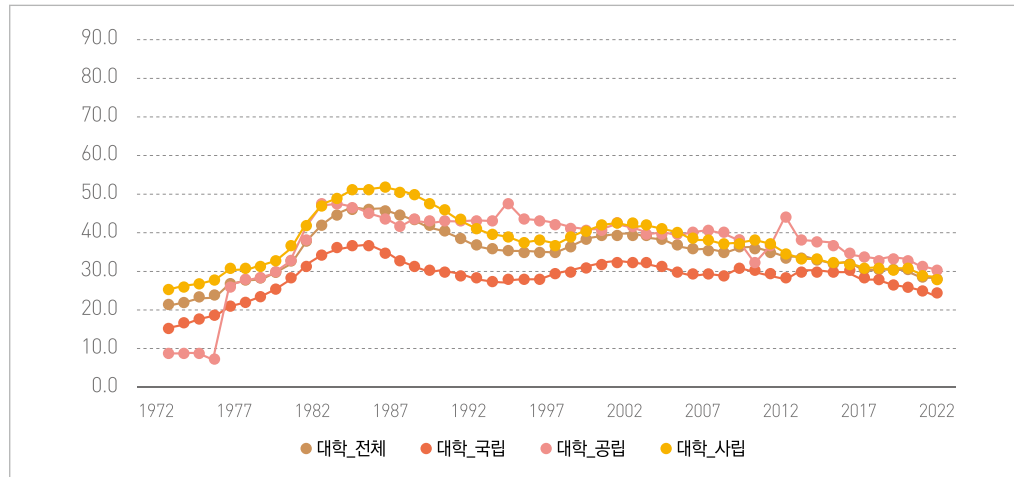
● [그림 11] 학생수별 고등학교 학급수 구성비(1972~2022) ●

1970년대 이후 초·중·고등학교의 학습 여건은 계속 개선됐지만, 고등교육기관의 학습 여건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개선되기 시작했다. 전문대의 경우 2001년까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하여 80.1명까지 이르렀다. 이후에는 주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2022년에는 46.4명까지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전문대가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 전문대의 특성이 전체 전문대 특성과 거의 일치한다. 국공립 전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이기는 하지만 규모와 비중 모두 작다.



● [그림 12] 전문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1979~2022) ●

대학도 전문대와 같이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학습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1984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47.1명으로 가장 높았다. 당시 사립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51.8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국공립, 사립대 모두 일부 부침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학습 여건이 개선되어 2022년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29.0명까지 감소하였다. 국립 대학은 24.7명, 공립대학은 30.9명, 사립 대학은 29.5명으로 최근에는 공립대학의 학습 여건이 사립 대학보다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 [그림 13]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1972~2022) •

지난 50년간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습 여건의 변화는 교육 기회의 확대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 확대된 교육 기회에 맞춘 교원수, 학교수의 확대를 통한 학습 여건의 개선 과정이었다. 교육통계를 통하여 양적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추후 질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양희준·최원석·김진희·박근영·박상옥·허준·이재준(2018).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교육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동엽(2020). 해방 후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발전 과정, 국가교육회의
- 임후남(2010). "교육과 경제발전" 160-199쪽.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경제 60년사 V: 사회복지·보건. 한국개발연구원.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 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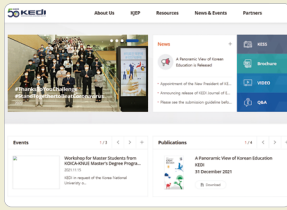
- 회원자격 및 특전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가입방법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문의처 홍보자료실 Tel. 043) 530-9245 E-mail. kedibook@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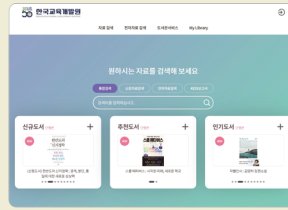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외 교육 분야, 다양한 영역의 동향과 정보, 교육계 소식 등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EDI 홈페이지
www.kedi.re.kr



KEDI 영문 홈페이지
kedi.re.kr/eng



AskKEDI 전자도서관
askkedi.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대학역량진단센터
uce.kedi.re.kr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센터
necte.kedi.re.kr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edpolicy.kedi.re.kr



교원치유지원센터
forteacher.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www.edumac.kr



고교학점제
www.hscredit.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www.hub4u.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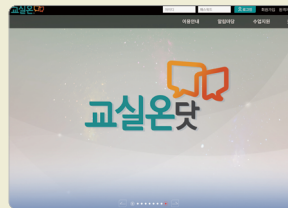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www.afterschool.go.kr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ged.kedi.re.kr



Wee프로젝트
www.wee.go.kr



교실온닷
edu.classn.kr

한국교육개발원(KEDI) SNS

- 한국교육개발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KEDIPR
-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youtube.com/c/한국교육개발원KEDI
- 한국교육개발원 인스타그램 instagram.com/iam_kedi/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policy.net
- 교육통계서비스 블로그 blog.naver.com/kedi_cesi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페이스북 www.facebook.com/방송통신중고등학교-1732018736871708/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블로그 blog.naver.com/openschool_master



ISSN 1228-291X

「교육개발」웹진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은 창립 이후 50년 동안
교육개혁의 산실로서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50년 앞을 내다보며 여러 주체들과 함께
‘더 나은 삶, 지속가능한 삶’이 중심이 되도록
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데에 힘을 쏟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학습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교육 현장의 역동에 대한 건설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화 과정과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미래교육 체제를 열어 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뉴노멀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
융복합 연구 수행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체제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과 미래 교육 설계에 필요한
종합적·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배움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체제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에 대한 지식과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을 넘어 세계교육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교육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세계와 나눔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